

전략연구 2020-13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장창석 · 임다정

목 차

I.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수행 체계	7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9
제1절 공공 갈등관리와 중요성	9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12
제3절 갈등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1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6
III. 충남형 갈등정보체계(DB) 모형 구축	19
제1절 모형 구축의 필요성	19
제2절 모형 설계의 방향성	23
1. 모형설계의 기본 방향	23
2. 분석기준 설정	24

제3절 갈등정보체계 모형 재구축	25
1.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25
2. 데이터의 자료 구축 방법	27
제4절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	31
IV.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례 분석	34
제1절 사례분석 개요	34
제2절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례 분석	41
1. 월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41
2. 지역별 공공갈등 발생	69
3. 주체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99
4. 원인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100
5. 유형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101
6. 단계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102
제3절 시사점	103
V. 결 론	104
제1절 연구의 결론	10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5
1.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방향	105
2.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활용 방안	107
제3절 모형적용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9
참고문헌	111
부 록	114

표 목 차

〈표 1〉 3개 기관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비교 분석	27
〈표 2〉 3개 기관별 데이터의 자료 구축 방법	30
〈표 3〉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분석 모형	32
〈표 4〉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분석표(안)	33
〈표 5〉 공통 제거 항목	36
〈표 6〉 활용 신문자료	39
〈표 7〉 2012년도 활용 기사 건수	42
〈표 8〉 2012년도 기준 상위 10 단어	43
〈표 9〉 2012년도 1월 기준 상위 10 단어	45
〈표 10〉 2012년도 2월 기준 상위 10 단어	47
〈표 11〉 2012년도 3월 기준 상위 10 단어	49
〈표 12〉 2012년도 4월 기준 상위 10 단어	51
〈표 13〉 2012년도 5월 기준 상위 10 단어	53
〈표 14〉 2012년도 6월 기준 상위 10 단어	55
〈표 15〉 2012년도 7월 기준 상위 10 단어	57
〈표 16〉 2012년도 8월 기준 상위 10 단어	59
〈표 17〉 2012년도 9월 기준 상위 10 단어	61
〈표 18〉 2012년도 10월 기준 상위 10 단어	63
〈표 19〉 2012년도 11월 기준 상위 10 단어	65
〈표 20〉 2012년도 12월 기준 상위 10 단어	67

〈표 21〉	지역별 활용 기사 건수	70
〈표 22〉	천안시 기준 상위 10 단어	71
〈표 23〉	공주시 기준 상위 10 단어	73
〈표 24〉	보령시 기준 상위 10 단어	75
〈표 25〉	아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77
〈표 26〉	서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79
〈표 27〉	논산시·계룡시 기준 상위 10 단어	81
〈표 28〉	당진시 기준 상위 10 단어	83
〈표 29〉	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85
〈표 30〉	부여군 기준 상위 10 단어	87
〈표 31〉	서천군 기준 상위 10 단어	89
〈표 32〉	청양군 기준 상위 10 단어	91
〈표 33〉	홍성군 기준 상위 10 단어	93
〈표 34〉	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95
〈표 35〉	태안군 기준 상위 10 단어	97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8
[그림 2] 연도별 충청남도 공공갈등발생 현황	34
[그림 3] 형태소 분석 예시	35
[그림 4] 분석 절차	37
[그림 5] KoNLP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KAIST 품사 태그 표	38
[그림 6] 2012년 월별 공공갈등 발생 건수	41
[그림 7] 2012년도 기준 상위 10 단어	44
[그림 8] 2012년도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44
[그림 9] 2012년도 1월 기준 상위 10 단어	46
[그림 10] 2012년도 1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46
[그림 11] 2012년도 2월 기준 상위 10 단어	48
[그림 12] 2012년도 2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48
[그림 13] 2012년도 3월 기준 상위 10 단어	50
[그림 14] 2012년도 3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50
[그림 15] 2012년도 4월 기준 상위 10 단어	52
[그림 16] 2012년도 4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52
[그림 17] 2012년도 5월 기준 상위 10 단어	54
[그림 18] 2012년도 5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54
[그림 19] 2012년도 6월 기준 상위 10 단어	56
[그림 20] 2012년도 6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56

[그림 21] 2012년도 7월 기준 상위 10 단어	58
[그림 22] 2012년도 7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58
[그림 23] 2012년도 8월 기준 상위 10 단어	60
[그림 24] 2012년도 8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60
[그림 25] 2012년도 9월 기준 상위 10 단어	62
[그림 26] 2012년도 9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62
[그림 27] 2012년도 10월 기준 상위 10 단어	64
[그림 28] 2012년도 10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64
[그림 29] 2012년도 11월 기준 상위 10 단어	66
[그림 30] 2012년도 11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66
[그림 31] 2012년도 12월 기준 상위 10 단어	68
[그림 32] 2012년도 12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68
[그림 33] 2012년 지역별 공공갈등 발생 건수	69
[그림 34] 천안시 기준 상위 10 단어	72
[그림 35] 천안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72
[그림 36] 공주시 기준 상위 10 단어	74
[그림 37] 공주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74
[그림 38] 보령시 기준 상위 10 단어	76
[그림 39] 보령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76
[그림 40] 아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78
[그림 41] 아산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78
[그림 42] 서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80
[그림 43] 서산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80
[그림 44] 논산시·계룡시 기준 상위 10 단어	82

[그림 45] 논산시·계룡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82
[그림 46] 당진시 기준 상위 10 단어	84
[그림 47] 당진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84
[그림 48] 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86
[그림 49] 금산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86
[그림 50] 부여군 기준 상위 10 단어	88
[그림 51] 부여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88
[그림 52] 서천군 기준 상위 10 단어	90
[그림 53] 서천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90
[그림 54] 청양군 기준 상위 10 단어	92
[그림 55] 청양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92
[그림 56] 홍성군 기준 상위 10 단어	94
[그림 57] 홍성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94
[그림 58] 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96
[그림 59] 예산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96
[그림 60] 태안군 기준 상위 10 단어	98
[그림 61] 태안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98
[그림 62] 주체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99
[그림 63] 원인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100
[그림 64] 유형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101
[그림 65] 단계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102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는 이념과 가치, 이해관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갈등 중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갈등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최근에는 지역내의 공동체 붕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갈등은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서 최근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는 공공갈등의 양상으로 인하여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복잡성이 증대된 공공갈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화된 갈등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사전예방적, 효과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갈등 해소방안 마련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갈등관리 방식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공공갈등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갈등관리가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갈등은 정책의 구상 및 집행 단계에서 갈등의 단계별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리는 그러한 다양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구축, 활용의 노력은 공공갈등 관리와 갈등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 기관(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선문대학교 정부간 관계연구소 등)에서 갈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갈등 정보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갈등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카드를 작성·관리·운영 중이며, 관리대상별로 중점관리, 부서자체 관리, 관심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서 목록으로 관리중인 갈등은 18건이며, 중점관리 대상 4건, 관심사항 1건, 부서자체관리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른 분류보다는 관심도와 진행상황, 관심도에 따라 목록이 분류되고 있으며, 그 수와 내용도 상당히 단편적이다. 현재 공공갈등 목록의 관리는 효율적 갈등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정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충청남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하여 갈등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갈등관리가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적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정보와 사례의 부재는 대응 경험 손실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공공갈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갈등정보체계는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 갈등정보체계의 구축은 갈등 예방 및 해결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 지역주민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한 과학적 갈등 관리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일회성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유사 또는 동질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원인 역시 각 유형별로 유사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유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의 공공갈등 관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의 정책갈등 관리와 미래에 발생할 공공갈등의 적실성 있는 예측 및 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며, 이를 활용한 효율적 갈등관리 구현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새로운 사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창조적 갈등 해결 방안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사한 사례의 내용의 비교와 학습을 통한 도출이 실용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충청남도 타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공갈등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형’으로 재구축하고자 한다. 재구축은 갈등정보체계의 필요성과 향후 갈등정보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과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존의 구축되고 있는 공공갈등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충청남도의 공공갈등의 과학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기관에서 구축한 갈등데이터베이스는 각 기관의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갈등사례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지만, 각 갈등 데이터베이스의 갈등사례 대상 및 선정기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어와 분류기준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방도와 활용성이 낮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관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들

‘공공갈등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양질의 공공갈등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형’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축된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적용하여 충청남도내의 과거 공공갈등 사례 분석을 갈등관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발생과 관련한 사례 분석은 갈등의 발생원인, 발생요인들의 변화, 이해관계자의 행태변화, 갈등관리 법령 및 제도화, 정보 및 환경변화, 대응과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관리하여 갈등관련 지식을 공유하게 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갈등정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갈등정보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제적 활용방안 모색하여, 공공갈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Nonaka(1994)는 “지식관리체계란 지식을 공유 및 승화시켜 형식화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형식적 지식을 다시 암묵적 지식으로 선 순환시킴으로써 조직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리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갈등정보체계는 지식관리 체계적 관점에서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자료와 접근의 용이성, 지식의 재창조, 전환 및 활용을 촉진하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현황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갈등정보체계의 장점과 이를 활용한 공공갈등 사례 데이터 축적, 개선방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공갈등의 특성에 맞는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크게 공공갈등과 갈등정보체계 구축 분야로 나누어진다. 최근 공공갈등 해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대처와 관리방식의 도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점점 다양화, 복잡화 되는 공공갈등의 체계적 접근과 관리는 해결을 위한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한 갈등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공공갈등과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써 갈등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증가하는 공공갈등의 추세속에서 민선 5기(2010. 7. 1~2014. 6. 30.)는 충청남도에서 특히 갈등관리가 본격적으로 중요 과제로 대두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는 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이라는 도정방침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정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은 도내에서 갈등이 많이 증가되었던 시기로 갈등관리 현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선5기의 전환기인 2012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선택하였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충청남도의 효율적 공공갈등을 위한 갈등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모형구축과 활용방안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날로 복잡성이 증대되는 공공갈등 관리의 성공 여부는 갈등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인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구축을 위한 이론검토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충청남도에 적용가능한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 현황과 타 기관과의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구축된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활용하여 충청남도내 주요 공공갈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와 관련 내용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갈등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헌조사, 선행연구 검토, 의견조사, 사례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외 연구문헌,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공공갈등 관리의 정의와 DB 구축의 필요성 등 이론을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나 논문 등을 통하여 알려진 경험적 지식의 축적 필요성과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등을 조사하여 통하여 공공갈등, 갈등정보 체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그에 따른 개념정의, 정책갈등의 주체, 갈등관리 과정,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현황과 타 기관의 사례조사를 비교하여 갈등정보체계 모형 재구축 및 활용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형의 분석 영역을 재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 영역과 분석 항목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기관 전문가·실무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여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대상 기간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재구축된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갈등을 구분하였으며, 확장성 분석을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활용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공공갈등, 갈등정보체계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선행 연구기관의 공공갈등사례 정보 구축에 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행연구, 문헌조사, 현황분석, 실태분석,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공공갈등 사례의 정보화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갈등정보체계 구축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초 작업을 토대로 선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에 필요한 정책적 방안마련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수행 체계

본 연구의 전체 흐름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크게 1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로 연구의 수행을 위한 기준 설정과 수행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갈등정보체계 재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갈등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개념정의와 중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토대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한다.

다음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의 실태와 타 기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에 적용 가능한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재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갈등관리 데이터 구축에서 제시되고 있는 항목별 분류체계들을 종합하여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재구축된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적용하여 충청남도 사례 분석과 정책적으로 유용한 갈등정보체계의 활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갈등관리체계 모형을 실제 적용해보고 갈등의 유형과 요인들을 도출한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갈등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등정보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론검토, 현황 및 실태 비교분석, 갈등정보체계 모형재구축, 사례조사를 통한 확장성 분석 등의 흐름으로 각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여기에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는 갈등정보체계 모형 구축과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도와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공공 갈등관리와 중요성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활동 즉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해결하며, 예상되는 갈등상황을 미리 예방하는데 관심을 갖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관리의 구성요소와 관리방식에는 지원체계(인력, 예산 등 갈등해결을 위한 기제들의 조직적 체계성), 리더의 관심(해결 의지), 갈등관리 담당자의 관심과 전문적 능력(위임된 권위-현장의 민감성과 직결)이 중요하다(하혜영, 2011).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관리 정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rcovich(1984)는 갈등관리를 ‘갈등이 확대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갈등관리란 갈등과정과 갈등의 결과가 생산적이고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임동진 외, 2010). 효과적인 갈등관리란 갈등을 없애거나 미리 방지(conflict prevention)하고 통제(conflict control)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당사자들의 가치와 혜택을 증가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손실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Krauss(1984)는 갈등관리를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갈등 이슈가 합의된 절차에 의해 다루어져서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adim(1986)은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동기부여 강화, 사기증진, 개인 및 조직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andole(1987)은 갈등관리를 갈등규제(conflict regulation)와 동의어로 간주하고 갈등개입과 갈등해결이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영진(2001)은 조직이나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모적인 분쟁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접근방식으로 갈등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이 무절제하게 표출되는 것을 막고, 조직, 사회,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3)는 일단 발생한 갈등의 강도(intensity)를 조절하고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고, 권영규(2006)는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시키거나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광일(1994)은 갈등관리를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해운 외(1997)는 갈등관리를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해소 또는 진정시키고, 갈등의 순기능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박연호 외(1999)는 갈등관리를 ‘조직관리의 핵심적 활동의 하나로서 조직에 해(害)가 되는 갈등은 해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동시에 조직에 유익한 갈등은 조장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안성민(1999)은 ‘갈등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갈등의 편익을 늘리고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논의한 국내·외의 갈등관리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하면, 갈등관리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소시키거나 완화하는 등 갈등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갈등으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빈발하고 심화되면서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립과 투쟁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대화와 타협,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문하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갈등관리를 체계화, 조직화함으로써 적기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갈등은 서로 다른 공익(public interests)간의 충돌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은 공익(public interest)과 사익(private interest)간의 충돌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론 서로 다른 공익간의 충돌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서로 다른 공익 간의 경쟁은 좋은 공공정책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Dukes, 2006). 또한 공공갈등은 합리적인 갈등조정제도가 없거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나 기대에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Mack & Snyder, 1971). 갈등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적대적인 갈등상황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갈등상황이 적대적인 갈등이 아닌 평화로운 해결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Bartos & Wehr, 2002).

공공갈등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 정책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정부와 국민 간에 상호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갈등관리이다. 대개의 경우 공공갈등은 하나의 정부부처가 아닌 여러 정부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그 해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성격상 불확실성이 높거나 인식상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만큼의 더 큰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공공갈등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책지연은 물론 정책의 거래비용 역시 매우 커지게 된다. 특히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정책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정책대상 집단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홍성만 외, 2007). 따라서 정부는 공공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피해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갈등관리는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문제해결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공공갈등관리를 체계화, 조직화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국가경영의 차원에서도 미리 공공갈등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적기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공공갈등관리를 통하여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명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시 말하면, 공공갈등의 편재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쌍방적 관계로 발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관리는 공공갈등의 실패 및 성공요인으로부터 개선을 가능하게 해 준다. 즉, 공공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결함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 시설갈등 유형화 연구를 살펴보면, 단일(소수) 사례 연구를 통해 갈등과정을 기술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주체, 대상(원인), 단계 등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갈등 주체로서 대체로 해당 정책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및 집단 간 갈등, 정부와 지역민 갈등,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 등의 정부 간 갈등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권영규, 2006; 윤태웅, 2012; 임동진, 2011; 정용덕, 2010; 박관규·주재복, 2014; 박치성·정창호, 2014; 하성규·김성연, 2007; 하혜영, 2007a; 하혜영·이달곤, 2007).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분류가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의 정치권, 사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언론, 전문가, 사법기관, 조정위원회 등의 기타 이해관계자를 추가하거나(박치성 외, 2014), NGO를 중요한 행위자로 다루기도 한다(하혜영 외, 2007). 또한 정부 이해관계자로 기존의 중앙, 지방정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하거나(임동진, 2011; 하성규 외, 2007) 지방정부가 갈등당사자로 되는 경우에 집중하여 갈등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도 있다(박관규 외, 2014).

둘째, 갈등대상(원인)으로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다(권영규, 2006; 이시경, 2003; 임동진, 2011; 정용덕, 2010; 하성규 외, 2007; 하혜영, 2007a; 하혜영 외, 2007). 이들 연구들이 다루는 갈등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치갈등, 입지갈등 여부 등을 다루거나(박치성 외, 2014; 하혜영, 2007a; 하혜영 외, 2007), 이익갈등, 권한 내지 가치갈등(권영규, 2006; 이시경, 2003), 이익갈등, 입지갈등, 정책갈등, 노사갈등, 개발갈등(임동진, 2011), 이익갈등, 의사결정권 배분, 이념갈등, 정체성 갈등으로 접근하는 등(정용덕, 2010) 연구목적에 맞게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갈등단계를 중심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다(권영규, 2006; 임동진, 2011; 이시경, 2003; 하혜영 외, 2007). 이들 연구들은 갈등단계를 잠재적/현재적 관점(권영규, 2006) 또는 갈등종결 여부(하혜영 외, 2007)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거나, 잠복기, 표면화, 완화, 사후관리로 확대하여 갈등전개상황을 유형화하였다(임동진,

2011). 이시경(2003: 186)은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으로 갈등을 구분하고 대부분의 갈등은 정책의제형성과정과 결정과정에서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정책평가과정에서의 갈등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 기타 유형화 기준으로 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거나(정용덕, 2010; 하혜영, 2007a) 시설유형과 함께 지역범위, 재화 종류 등을 반영하고(박치성 외, 2014), 노동, 지역, 계층, 환경 등 공공갈등의 분야별 유형과 함께 종료방식, 갈등 강도에 따라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가상준 외, 2009). 하혜영(2007a)은 국책, 광역, 지역사업에 따른 사업규모와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정치선거 여부도 갈등유형화에 고려하고 있으며, 갈등관리방식으로서 대체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용덕(2010)은 관료정치, 의회 및 정당정치, 사회집단 간,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등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연구들을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갈등유형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일반화를 추구한 연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지향하거나, 유형화를 시도하더라도 주로 시설유형, 주요 갈등이해관계자 구분, 갈등원인, 갈등진행과정, 갈등해결방안 등 갈등의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단편적 차원의 유형분류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갈등의 정의를 고려할 때 동일한 유형의 정책갈등사례라 하더라도 관련 가치의 복잡성, 갈등 관계의 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전반적인 갈등의 정도와 규모, 해결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유용한 지식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정책갈등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책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종류의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이다.

제3절 갈등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은 갈등이슈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 갈등해결방식으로 갈등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하혜영, 2009).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갈등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는 시·공간적으로 단편적이며 갈등사례를 사건별로 나열하거나 지역별로 분류 또는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권경득 외, 2014).

이러한 문제점에서 김광구·김동영(2012)은 갈등DB의 필요성을 갈등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 갈등당사자들이 각종 정보이용이 용이하고, 갈등조정자들에게 다양한 갈등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조정 전문성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접근성, 갈등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화가능성, 학문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술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정의하면 어느 한 조직에서 다수의 응용 시스템들이 사용하기 위해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우 외, 2004).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접근성이 용이하여, 사용자나 프로그램의 데이터 요구에 실시간으로 처리,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 데이터의 내용의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목적이 다른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갈등연구의 질적 연구는 많은 갈등현상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반해, 갈등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는 갈등현상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설명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소수사례를 통해 갈등의 전개과정과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갈등해결과 대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사례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갈등해결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사례탐색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분석에 편중되다 보니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사례별 특성을 관찰 및 기술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주관적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갈등현상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한계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갈등연구에 있어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현상을 정의하고, 해석함으로써 현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준섭·김지수(2011)는 공공갈등에서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갈등연구에 있어 갈등을 객관적인 이해관계 충돌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이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구성물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공갈등관리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실무기관에서 자체 내규를 토대로 의사결정자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갈등관리가 대통령령 이외에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시행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관리가 단편적이며,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사례가 적고, 대부분 보완을 요구하는 사업이어서 사례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조성배, 2013). 그 동안 공공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 연구성과가 집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갈등해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등연구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개발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구자 개인이 갈등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갈등예방 및 대안모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합적인 공공갈등연구와 체계적인 이론정립을 위해서도 공공갈등사례 DB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갈등관리의 구성 요소로써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갈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과 관심이 이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수의 연구와 기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갈등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국내에서 구축된 갈등 DB는 개인적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구를 위하여 구축한 경우도 있고 기관차원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갈등상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놓은 곳도 있다. 그러나 각 연구와 기관마다 갈등 사례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활용 목적 또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갈등사례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 개인 차원의 갈등 DB 구축

개인 차원의 갈등 DB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축적해 놓은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모아서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구조화해 놓은 DB를 말할 수 있다. 대부분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개인 또는 연구팀이 구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하혜영(2007)의 경우는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 사례 337개를 대상으로 갈등 사례들을 구조화하였다. 기존의 공공갈등 연구가 개별사례를 대상으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일반적 한계를 인식하고 광범위한 사례 수집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동진(2011)은 국무조정실의 갈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갈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였다. 박관규·주재복(2014)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부갈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110건의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구조화하였다. 박치성·정창호(2015)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등재지 이상 행정학·정책학 학술지에서 다루어진 84편의 사회간접자본 갈등 연구논문과 6편의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68개의 사례 중 51개를 DB화하여 갈등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새로운 기준으로 갈등을 유형화하고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정부부처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적 차원의 데이터화로 인해 공개적인 활용이 어렵고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기관 차원의 갈등 DB 구축

기관차원의 갈등 DB의 특징은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하였고, 이를 세부적인 기준으로 구조화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기관차원의 갈등 DB의 특징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엑셀 등) 등을 이용하여 파일 형태로 구축한 것을 벗어나 정보시스템의 형태로 구축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갈등 DB는 실시간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해당DB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단국대학교 공공분쟁 DB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에서 2006년부터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공공분쟁 DB를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가상준 외, 2007). 단국대학교 공공분쟁 DB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0여 건의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발생한 주요 공공분쟁을 환경분쟁, 이념분쟁, 노동분쟁, 지역분쟁, 계층분쟁, 교육분쟁 등 6개 분쟁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축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 DB는 갈등사례 DB와 갈등연구 DB 및 갈등조직·인력 DB를 구축하고 있어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갈등사례 DB는 1963년의 의약분업 갈등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1,000여 개의 사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발생기간, 종료유무, 갈등의 원인·성격·주체·주제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과 선택이 가능하다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공공정책 갈등사례 DB는 1948년부터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공공정책 갈등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1948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2,000건의 공공정책 갈등사례를 갈등성격, 갈등유형(주체별), 정권별, 행정기능별, 지역별, 갈등해결여부, 갈등해결기제, 사례명 등으로 DB화 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갈등관련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갈등 지도(The Map for Public Conflict)를 구축하였다. 특정 지역의 갈등 현상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특정 갈등에 대하여 지역적 위치와 함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타 기관과의 차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갈등 DB 및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 및 갈등사례들을 정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구축 방법 및 활용가능성에 있어 몇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DB를 구축하는 기관 및 조직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DB 구축에 선택된 사례의 편차가 존재한다. 각 기관 간 갈등 DB를 분류한 기준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분석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분석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DB에 수록된 정보가 제한적인 편으로, 사례의 개요 및 기본적인 분류 정도만 제시되고 있어 실제로 실무에 사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들로 현재까지 구축된 갈등 DB는 갈등관련 전문가,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기관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갈등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Ⅲ. 충남형 갈등정보체계(DB) 모형 구축

제1절 모형 구축의 필요성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정 사례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며, 모든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의견의 대립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갈등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결정 후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거 정책과정이 단순히 공공 분야의 기관들에 의해 기획되고 집행되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업무수행의 주체들을 통해 민간 부분의 조직이 집행을 대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양한 담당 기관들 간의 협력 하에 정책이 집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대상의 정확한 수혜자와 부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공공갈등 발생시 갈등관리 주관기관의 불분명과 주체 자체가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정책추진 여건의 변화 속에서 공공갈등 발생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편이며, 민주적 절차에서 중시하는 개념들 역시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하여 정부주도의 갈등해결 노력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상당한 수준의 역동성을 띄며 형성, 집행, 변화 된다. 정책이 이처럼 역동적 과정 안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며, 그 내용이나 집행방식 역시 복잡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정확한 이해당사자들을 확인하는

과업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거시적, 혹은 세부적 범주화 등을 통해 갈등 상황을 구분, 그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각 갈등 사례마다 보여주는 특징이 너무 상이하여 공통되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갈등의 상황과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 공공갈등이 언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그 전개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갈등상황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업무담당관들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의 전개와 해결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사회적 변화와 공공갈등 발생의 특성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공공갈등 상황에 대한 회피와 외면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황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학습과정이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나 다양성,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 갈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적 분석틀의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갈등을 다루는 이론과 기법은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고, 정부기관, 자치단체에서 업무와 관련된 편람과 매뉴얼들은 그 유형과 수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상황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료나 선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며, 일반적 매뉴얼은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실무적 활용도가 낮다. 그 결과 갈등발생 초기 업무담당자들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갈등의 대응이 시작되면서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사례들이 확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갈등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갈등대응과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갈등발생 초기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유사한 사례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어떠한 형태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갈등정보체계 모형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제고와 공공갈등 담당자, 갈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정보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갈등정보체계는 갈등사례에 대한 학습과 이를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구축되는 수단적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된 결과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분석서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다. 또한 시대적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 단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현안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유사 갈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갈등정보체계의 모형 구축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잡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범주화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단기적, 즉흥적 대응방안 마련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축적·발전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별 특징을 파악하고 갈등상황이 어떠한 전개 양상, 혹은 해결 과정을 거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객관적·공식적 형태의 관리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과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갈등의 발생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정책집행의 지연과 공동체 붕괴 등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법과 제도의 구축과 더불어 갈등관련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정보체계 모형설계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제시된다. 먼저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형의 필요성이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갈등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갈등관련 정보구축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내부활용을 위한 단편적 사례 접근과 현상 위주의 기록, 비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분석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형구축을 통해 갈등관련 정보가 객관적, 지속적으로 구축된다면 갈등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선행 사례의 학습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충남형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갈등은 발생해서 지속되는 기간동안 예측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축적된 자료들은 갈등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갈등에 관한 갈등정보체계 모형의 구축과 적용은 실제 갈등 사례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 공공갈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담당자의 정책학습을 통한 역량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 갈등현장에서 필요한 실효성과 경험의 간접경험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식차이에 대한 보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체계적 갈등정보체계 모형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다양한 수요자에 의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담당자, 민간 이해당사자 등이 갈등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모형 설계의 방향성

1. 모형설계의 기본 방향

모형구축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생하고 발생이 예측되는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전환 등을 위해 갈등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공갈등은 발생 단계별로 갈등의 주체, 갈등기간, 갈등성격, 갈등유형 등과 갈등관리, 해결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갈등의 분석은 단계별로 활용가능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해결방식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갈등해결의 프로세스 설계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정보체계 모형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에 사용되던 통계자료나 분석 체계로는 일반적 수집이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이며, 공공갈등 분야에서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복잡화·다양화 되어가는 현대 공공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 정보를 통한 미래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대처와 이해관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갈등 관리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정보체계 모형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모형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체계적이고 활용가능한 갈등정보체계 모형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 충청남도의 갈등정보 구축 및 운영, 선행연구와 기구축 운영기관에 대한 진단과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갈등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재구축 모형으로써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분류영역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갈등정보체계 운영, 활용 및 적용 방안을 고려하여 향후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효율적·과학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모형 설계를 통하여 구조화된 내용으로 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이 이루어져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프레임으로 따른 갈등구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분석기준 설정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형’ 재구축을 위해서는 분석영역과 분석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분석대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관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갈등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짧은 기간의 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활용성과 효과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공개적으로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갈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인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두 개의 기관이 조건에 부합되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선행연구 기관들은 갈등의 현상을 체계적이고 적용가능한 틀 속에서 살펴보고 있어 갈등분석과 연구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현황과 두 연구기관의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고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으로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갈등정보체계 및 운영에 대한 분석기준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첫째, 갈등 갈등정보체계의 자료수집 방법이다. 갈등정보체계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수집될 수 있으며, 기초데이터의 축적은 갈등정보체계의 기반으로써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본이다. 갈등사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수집 경로, 수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방법이다. 수집된 데이터의 공유 및 체계적 분석은 미래상황 예측으로 정책의 추진, 집행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과 타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갈등지역, 갈등지속기간, 갈등원인, 갈등주체, 갈등유형, 갈등의 강도, 갈등 해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분류와 구축방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자료 구축 및 분류에 대한 검토와 한계를 보완하여 갈등정보체계 모형이 재구축 된다면 객관적 판단에 의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갈등정보체계 모형 재구축

갈등정보체계 모형 재구축을 위하여 앞서 분석기준으로 설정한 자료수집방법, 자료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2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재정리하였다. 재정리 및 항목 선정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충청남도 현황과의 비교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자문회의 참가한 전문가들에게 현재까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현황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 기관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영역 및 항목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 분야와 항목의 기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와 각 연구기관별 갈등 데이터베이스 분류기준에 따라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1) 사례선정

갈등 사례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남도에서는 내부적 데이터베이스인 갈등관리카드를 작성·운영중이다. 2020년 현재 중점관리 대상 3건, 부서자체관리 8건 등 총 11건의 갈등관리카드를 운영중이다. 갈등관리 목록은 수년 동안 이어진 갈등중 해결이 된 갈등을 제외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정된 사례를 목록에 포함시키는 업데이트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한국 행정연구원은 1963년 의약분업 갈등을 시작으로 2020년 택시사업 갈등(타다)까지 총 40권의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중이나, 분석된 갈등사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방송 및 신문기사 등 언론자료,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지역관보, 각종 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자료를 갈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분쟁이라는 일정한 조건(연인원 500명이상, 100명이상 1회 집회이상, 갈등기간 7일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갈등사례의 선정기준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가 규정하는 갈등과 뉴스데이터 검색을 통해 충청남도의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갈등정보체계 구축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명칭선정

공공갈등의 명칭은 세 기관 모두 공공갈등 사례의 쟁점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대로 선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공갈등의 명칭은 사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례의 특징이나 이해관계자가 드러나는 것으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공개 여부

충청남도에서 관리중인 갈등관리 목록은 매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료의 공개 대상과 범위가 중앙행정기관, 충남도내 15개 시·군 등 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홈페이지 내에 갈등DB 카테고리를 통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역시 홈페이지 내에 갈등DB 카테고리를 운영중이나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갈등정보체계의 운영 목적은 과거 사례학습을 통한 미래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는 것이므로, 충남형 갈등정보체계에서는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업체명, 이해관계자명 등)가 포함된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거 운영기관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표 1〉 3개 기관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비교 분석

수집 및 활용	충청남도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사례선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정	내부 결정	분쟁 조건 충족
명칭선정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공개 여부	비공개	공개	비공개

2. 데이터의 자료 구축 방법

1) 갈등 지역

충청남도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사안에 대한 공공갈등만을 취합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주로 광역 자치단체 수준까지 갈등 지역을 구분하는데 반해, 분쟁해결 연구센터는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갈등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는 도정갈등과 그 밖의 갈등 중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으로 갈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본 모형에서는 충청남도의 조례를 범위를 반영하여 도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사안과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이 관여된 공공갈등만을 다루도록 설정하였다.

2) 갈등 지속 기간

갈등 지속 기간은 갈등발생시점과 갈등 종결시점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알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관리중인 갈등관리카드에 갈등의 종료일은 표시되지 않으며, 갈등이 종료될 경우 관리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 행정연구원은 갈등 발생시점과 종료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년단위로 입력하고 있는데 반해, 분쟁해결 연구센터는 갈등 발생시점, 갈등 종료시점, 갈등 지속일수를 각각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지속 기간은 갈등 발생시점과 갈등 종결시점을 구분하여 다루도록 설정하였다. 갈등종료 유무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갈등 시작과 종료날짜를 구분함으로써 종료일이 없는 사례는 진행중인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갈등의 주체(당사자)

충청남도에서는 갈등의 당사자를 유형에 의한 분류 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갈등의 경우 천안시-아산시, 민간업자의 시설입지 갈등의 경우 업체명-지역주민 등으로 사례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모두 갈등의 주체를 정부-정부, 정부-민간, 민간-민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간은 시민단체와 주민을 의미하며, 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갈등의 주체를 정부-정부, 정부-민간, 민간-민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에서는 기존 충청남도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여 정부, 주민, 시민단체, 업체로 구분하여, 갈등 사례별 특성에 따라 이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4) 갈등의 원인(성격)

충청남도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류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의 유형을 준용하여, 사실(신뢰)갈등, 이익(배분갈등), 관계(소통)갈등, 가치(신념)갈등, 정체성(존재)갈등, 구조적(갈등)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행정연구원과 분쟁해결 연구센터는 각각 이익-이익, 가치-가치, 이익-가치(가치-이익)로 구분하였다.

최근 갈등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단순한 분류 보다는 세분화된 분류를 통한 갈등사례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사실(신뢰)갈등, 이익(배분갈등), 관계(소통)갈등, 가치(신념)갈등, 정체성(존재)갈등, 구조적(갈등)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모형을 제안하였다.

5) 갈등의 영역(유형, 주제)

갈등의 영역은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갈등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다루는 범위에 따라 가치갈등, 입지갈등, 이익갈등, 권한내 가치갈등, 정책갈등, 노사갈등, 개발갈등, 의사결정권 배분, 이념갈등, 정체성갈등 등 연구 목적에 맞게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청남도에서는 갈등의 주제로는 지방행정, 지역개발, 교통관련, 비선호시설, 수자원 개발 등 사례별 특성에 맞는 주제를 임의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의 성격은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정책갈등, 기타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갈등주제별로는 환경, 개발(산업건설), 에너지, 국방, 보건복지, 교통, 행정, 문화 및 체육, 교육, 기타 등 10개로 세분화하고 있다. 한데 반해, 분쟁해결 연구센터는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분쟁 등 여섯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비교 분석,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통해 가장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 개발(산업건설), 에너지, 국방, 보건복지, 교통, 행정, 문화 및 체육, 교육, 기타 등 10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6) 갈등의 강도

충청남도에서는 갈등의 강도를 갈등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출기, 심화기, 조정기, 교착기, 해소기, 사후단계 등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행정연구원은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갈등의 강도를 분쟁 지속일수, 참여자수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갈등의 강도는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표출기, 심화기, 조정기, 교착기, 해소기, 사후단계 등 6단계를 준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7) 갈등해결 방법

충청남도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는데 반해, 분쟁해결 연구센터는 협상, 조정, 중재,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판결, 진압, 자진철회, 소멸, 입법 등

10가지로 구분하여 해결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갈등의 해결방법 역시 가장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협상, 조정, 중재,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판결, 진압, 자진철회, 소멸, 입법 등 10가지로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2〉 3개 기관별 데이터의 자료 구축 방법

DB 분류 기준	충청남도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사례 선정기준	내부자료	모든 갈등	규모가 큰 갈등
갈등지역	충청남도	광역지역	기초지역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발생/종료시점	발생/종료시점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갈등원인 (성격)	없음	이익, 가치갈등	이익, 가치갈등
갈등주체 (당사자)	정부-민간	정부-민간	정부-민간
갈등유형 (영역, 주제)	6개 유형	10개 주제	6개 유형
갈등의 강도	6단계	없음	참여자수, 갈등 지속기간

제4절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

충청남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행 연구기관(한국 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의 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 비교에 따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기관마다 각자의 활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갈등사례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어와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상에서 충청남도는 갈등이 유발되어 도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갈등만을 다루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검색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분쟁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각 기관별로 갈등사례 대상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관별 데이터베이스구축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갈등 영역 등 분류기준으로 삼은 항목마다 서로 다른 방식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관별 대상, 분류체계 등이 다른 점은 같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의 수집 경로나 대응에 대한 정보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자체의 실체와 이면에 숨겨진 갈등의 주요 요인의 파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갈등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와 타당성에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적 활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선행연구 기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갈등정체계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의 제시를 위하여 비교분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충청남도 실태를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완성하였다.

갈등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의 수집과 자료의 정리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 실태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모형을 재구축하여 제시하였으나, 추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3〉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분석 모형

DB 분류 기준		충청남도
데이터의 수집	갈등사례 선정기준	기사검색, 내부자료 활용
	명칭선정	사례별 특수성을 고려한 임의 선정
	공개여부	원칙적 공개
데이터의 자료구축	갈등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발생시점, 종료시점
	갈등주체 (당사자)	정부, 주민, 시민단체
	갈등원인 (성격)	사실(신뢰)갈등, 이익(배분)갈등, 관계(소통)갈등, 가치(신념)갈등, 정체성(존재)갈등, 구조적 갈등
	갈등유형 (영역, 주제)	환경, 개발(산업건설), 에너지, 국방, 보건복지, 교통, 행정, 문화·체육, 교육, 기타
	갈등의 강도 (진행단계)	표출기, 심화기, 조정기, 교착기, 해소기, 사후단계
	갈등의 해결방법	협상, 조정, 중재,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판결, 진압, 자진철회, 소멸, 입법

〈표 4〉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분석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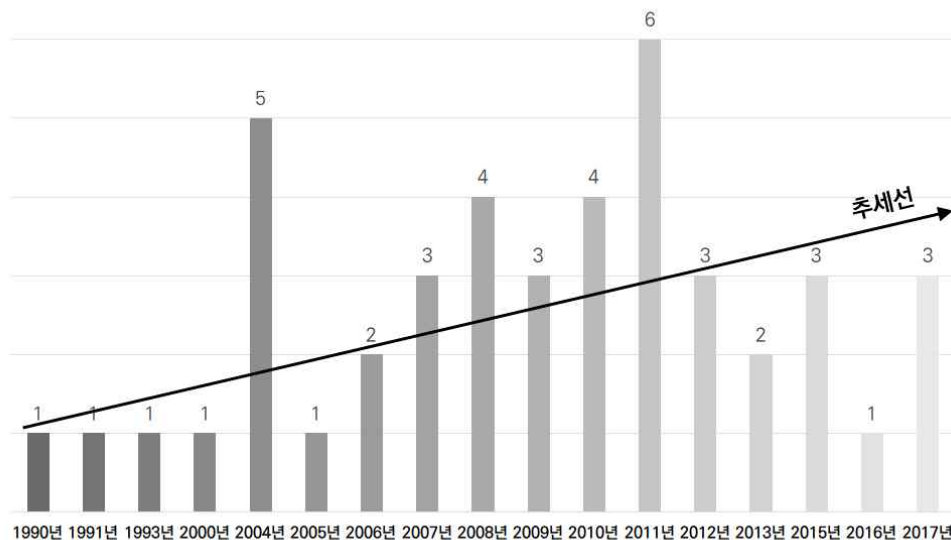
갈등명			
갈등지역		갈등주체	
갈등원인		갈등유형	
갈등시작 갈등종료		갈등단계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4. 갈등결과(해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IV.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적용하여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충청남도의 공공갈등발생에 대한 연도별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1990년도부터 최근년도 까지 살펴본 결과 공공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민선 5기(2010년 7월 ~ 2014년 6월)기간 중 2010년과 2011년 비교적 큰 편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 5기에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이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끊임없이 분출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충청남도 공공갈등발생 현황

이러한 시기의 충청남도 공공갈등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을 분석년도로 선택하였다. 2012년은 전년도에 비해 갈등이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선5기 기간 중 전환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시기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공공갈등 사례 분석을 위하여 먼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라이브리리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통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등의 언론사 기사 중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신문자료를 활용하여, 갈등, 분쟁, 소송, 민원, 반대 등 관련 유사용어를 포함 10개 검색키워드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54개의 갈등 사례를 발굴하였다. 1차적으로 분석된 기사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기준에 부합하는 갈등 중 사례 작성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책갈등 30건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30건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확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관련 기사의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향분석은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검토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의 예측과 현상에 대한 복잡한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충청남도의 주요 갈등은?

■ 문법 형태소

■ 실질 형태소 (색인어 추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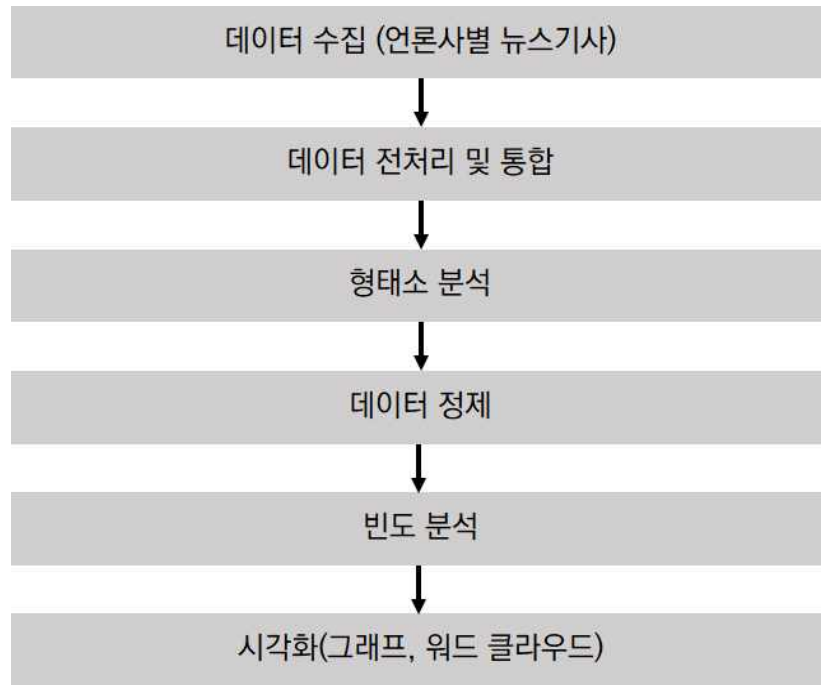
[그림 3] 형태소 분석 예시

〈표 5〉 공통 제거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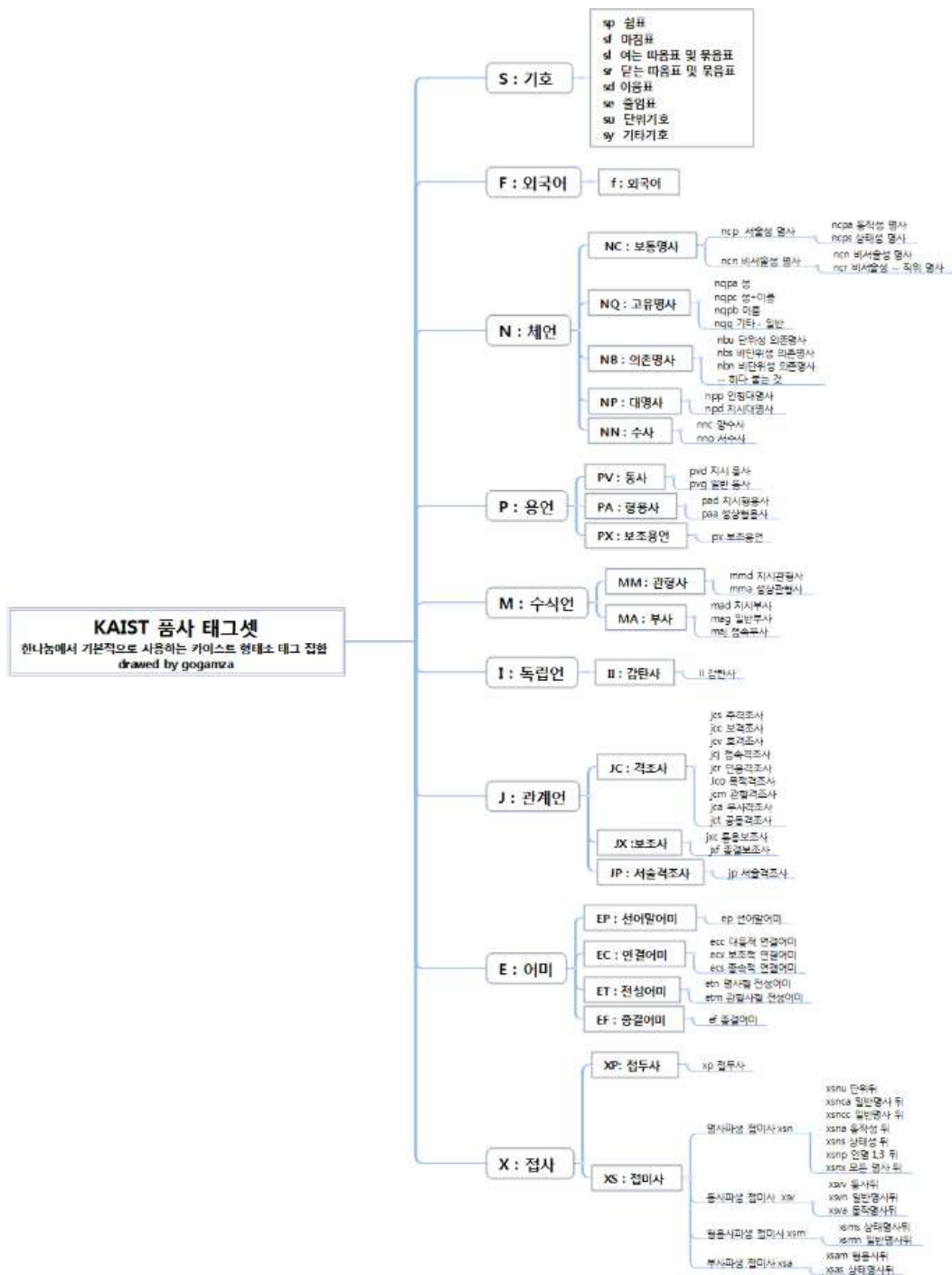
제거 항목	수행 코드
2 미만 단어	<code>data <- Filter(function(x){nchar(x)>1}, data)</code>
특수문자	<code>data <- gsub("\\W", "", data)</code>
기호	<code>data <- gsub("[:punct:]", "", data)</code>
공란	<code>data <- gsub(" +", "", data)</code>
숫자	<code>data <- gsub("\\d+", "", data)</code>
불필요 단어	<code>data <- gsub("지역명", "", data)</code>

수집한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출현된 단어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빈도수 분석이 진행된 데이터는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분석결과의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대표적인 텍스트 시각화 기법 중 하나이다. 그래프의 형태로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직관적이라는 시각화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워드클라우드는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텍스트에서의 해당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키워드 분석 시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공공갈등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갈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갈등’, ‘분쟁’, ‘집회’, ‘소송’, ‘민원’ 등을 키워드로 필터링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총 35개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총 271건의 기사를 정리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2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28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R 라이브러리는 KoNLP, stringr, dplyr, wordcloud2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의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4] 분석 절차



[그림 5] KoNLP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KAIST 품사 태그 표

(자료 : <https://github.com/haven-jeon/KoNLP/blob/master/etc/KoNLP-API.md>)

〈표 6〉 활용 신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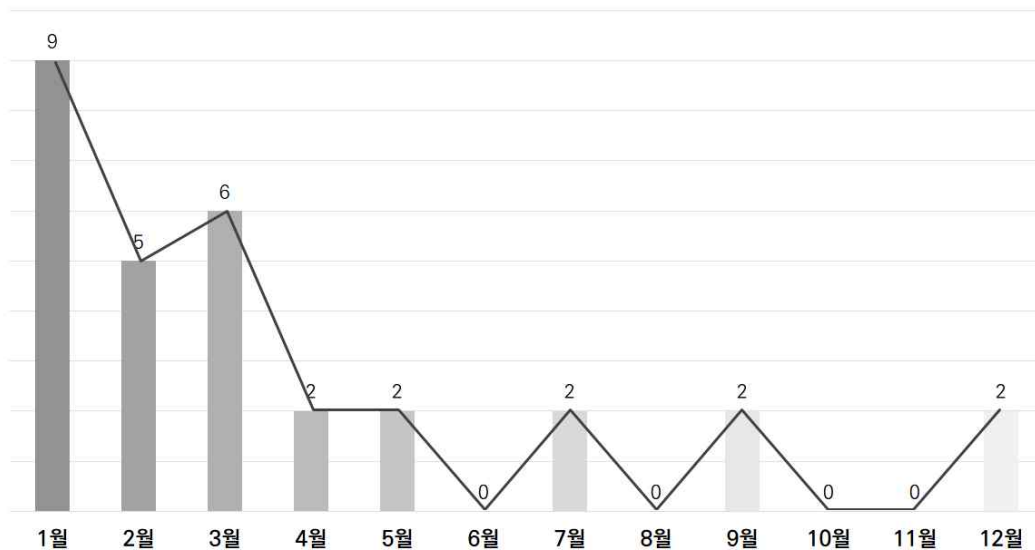
매체	기사 건수	기준시간
뉴시스	55	2012.01.20.~2012.12.26.
연합뉴스	32	2012.01.10.~2012.12.16.
충청투데이	81	2012.01.10.~2012.12.26.
뉴스1	13	2012.05.03.~2012.12.28.
경향신문	4	2012.01.19.~2012.07.12.
한국대학신문	1	2012.09.07
한국경제	1	2012.05.22.
경인일보	1	2012.04.19.
한겨레	3	2012.03.14.~2012.04.24.
매일경제	1	2012.06.05.
아시아경제	9	2012.01.24.~2012.11.12.
경기일보	5	2012.04.19.~2012.09.13.
대전시티저널	5	2012.08.02.~2012.10.23.
머니투데이	5	2012.01.20.~2012.10.30.
내일신문	13	2012.02.16.~2012.11.02.
서울신문	6	2012.02.03.~2012.06.05.
스포츠조선	1	2012.04.04.
경기신문	1	2012.06.18.
이투뉴스	1	2012.03.02.

매체	기사 건수	기준시간
뉴스핍	1	2012.03.12.
오마이뉴스	7	2012.02.24.~2012.12.06.
파이낸셜뉴스	2	2012.03.28.~2012.06.10.
SBS	1	2012.04.23.
서울경제	2	2012.03.06.~2012.10.22.
아시아뉴스통신	1	2012.08.15.
동아일보	1	2012.12.04.
프레시안	1	2012.07.05.
헤럴드POP	2	2012.10.21.~2012.12.04.
세계일보	4	2012.02.01.~2012.12.03.
새전북신문	1	2012.05.09.
정책브리핑	2	2012.04.02.~2012.07.17.
뉴스타운	4	2012.06.05.~2012.11.15.
서울파이낸스	1	2012.06.04.
YTN	1	2012.01.19.
인천일보	2	2012.04.19.~2012.04.22.
합 계	271	2012.01.10.~2012.12.28.

제2절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례 분석

1. 월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공공갈등 발생을 월별로 살펴본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연초에 20건으로 대부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위나 집회를 동반하는 공공갈등의 특성상 외부의 관심도와 연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연초에 외부의 관심을 받고 갈등사례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연초에 갈등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림 6] 2012년 월별 공공갈등 발생 건수

2012년의 공공 갈등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총 265건 중 37건으로 2월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5월(36건), 6월(28건), 4월(28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사가 가장 적은 달은 11월로 7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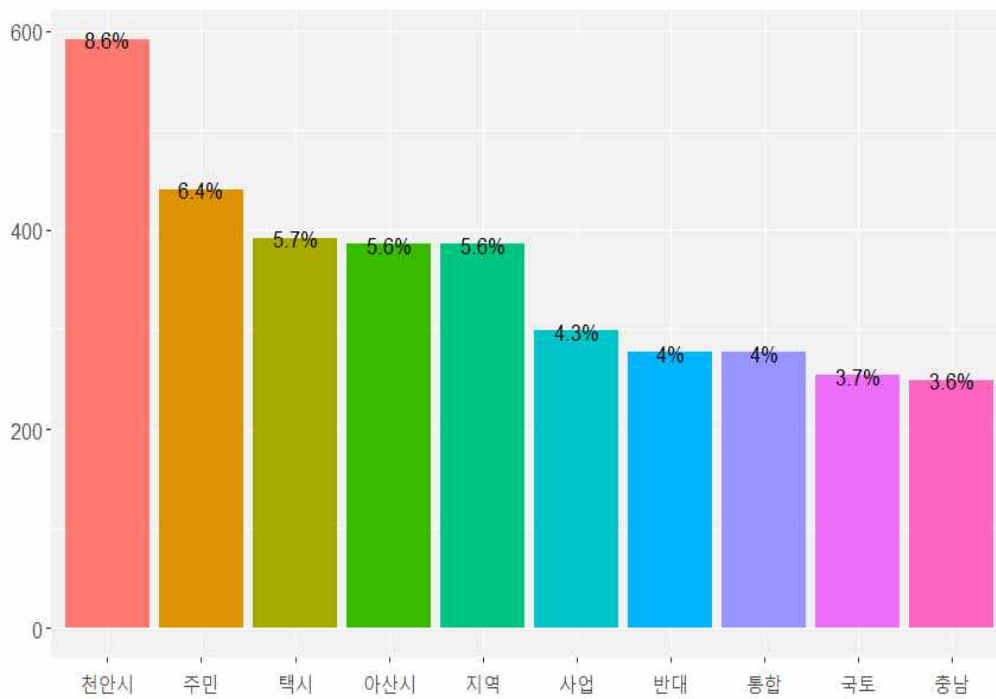
〈표 7〉 2012년도 활용 기사 건수

2012년도	기사건수
1월	10
2월	37
3월	21
4월	28
5월	36
6월	28
7월	26
8월	24
9월	21
10월	13
11월	7
12월	14
총 합계	265

2012년도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67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천안시(592회), 주민(441회), 택시(392회), 아산시(386회), 지역(386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가 KTX 천안·아산역 택시 영업권을 놓고 전체구역 통합안을 제시하고 직권 통합을 추진하면서 천안·아산 택시 업체간 갈등이 발생한 ‘천안아산 택시 영업권 구역’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 2012년도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천안시	592	8.6%
2	주민	441	6.4%
3	택시	392	5.7%
4	아산시	386	5.6%
5	지역	386	5.6%
6	사업	299	4.3%
7	반대	277	4.0%
8	통합	277	4.0%
9	국토	254	3.7%
10	충남	249	3.6%



[그림 7] 2012년도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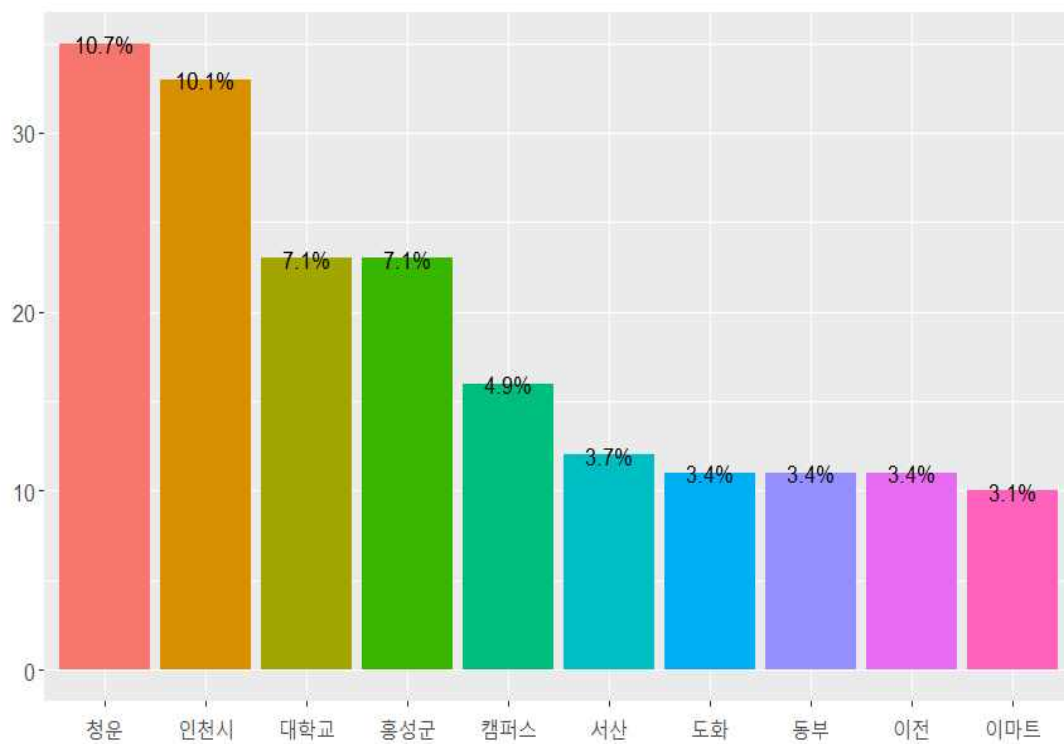


[그림 8] 2012년도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1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0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운(35회), 인천시(33회), 대학교(23회), 홍성군(23회), 캠퍼스(16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1월은 홍성군 관내에 위치한 청운대학교가 인천시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표출되며 갈등이 발생한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2012년도 1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청운	35	10.7%
2	인천시	33	10.1%
3	대학교	23	7.1%
4	홍성군	23	7.1%
5	캠퍼스	16	4.9%
6	서산	12	3.7%
7	도화	11	3.4%
8	동부	11	3.4%
9	이전	11	3.4%
10	이마트	10	3.1%



[그림 9] 2012년도 1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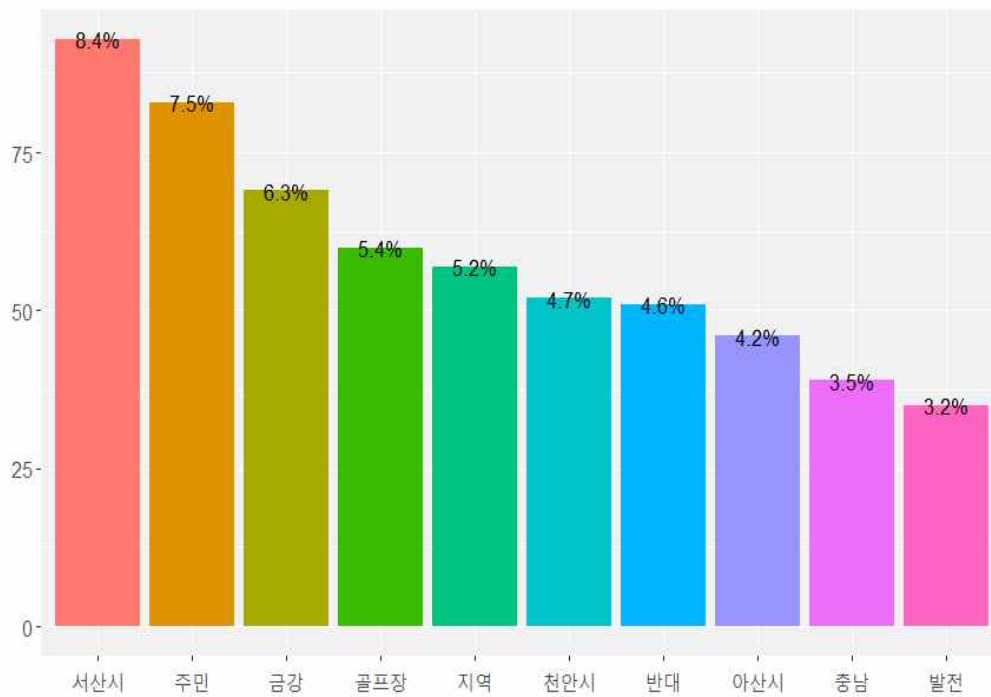


[그림 10] 2012년도 1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2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37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산시(93회), 주민(83회), 금강(69회), 골프장(60회), 지역(57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 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2월은 금강하구둑 건설에 관하여 서천군은 금강 수질악화와 연안수산업의 황폐화 및 장항항의 기능 상실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증설로 해수유통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대안 미비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과 아산시 영인면에 입지한 골프장의 증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골프장 증설’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10〉 2012년도 2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서산시	93	8.4%
2	주민	83	7.5%
3	금강	69	6.3%
4	골프장	60	5.4%
5	지역	57	5.2%
6	천안시	52	4.7%
7	반대	51	4.6%
8	아산시	46	4.2%
9	충남	39	3.5%
10	발전	35	3.2%



[그림 11] 2012년도 2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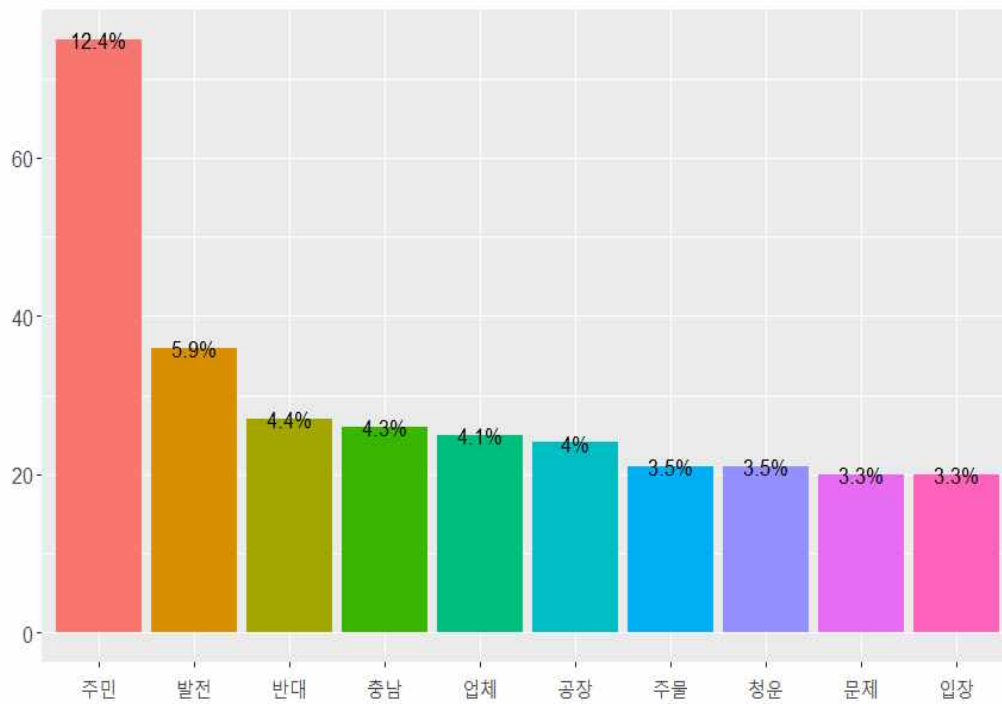


[그림 12] 2012년도 2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3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1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75회), 발전(36회), 반대(27회), 충남(26회), 업체(25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3월은 동부그린발전소에 대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동부발전 화력발전소 건립'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1〉 2012년도 3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주민	75	12.4%
2	발전	36	5.9%
3	반대	27	4.4%
4	충남	26	4.3%
5	업체	25	4.1%
6	공장	24	4.0%
7	주물	21	3.5%
8	청운	21	3.5%
9	문제	20	3.3%
10	입장	20	3.3%



[그림 13] 2012년도 3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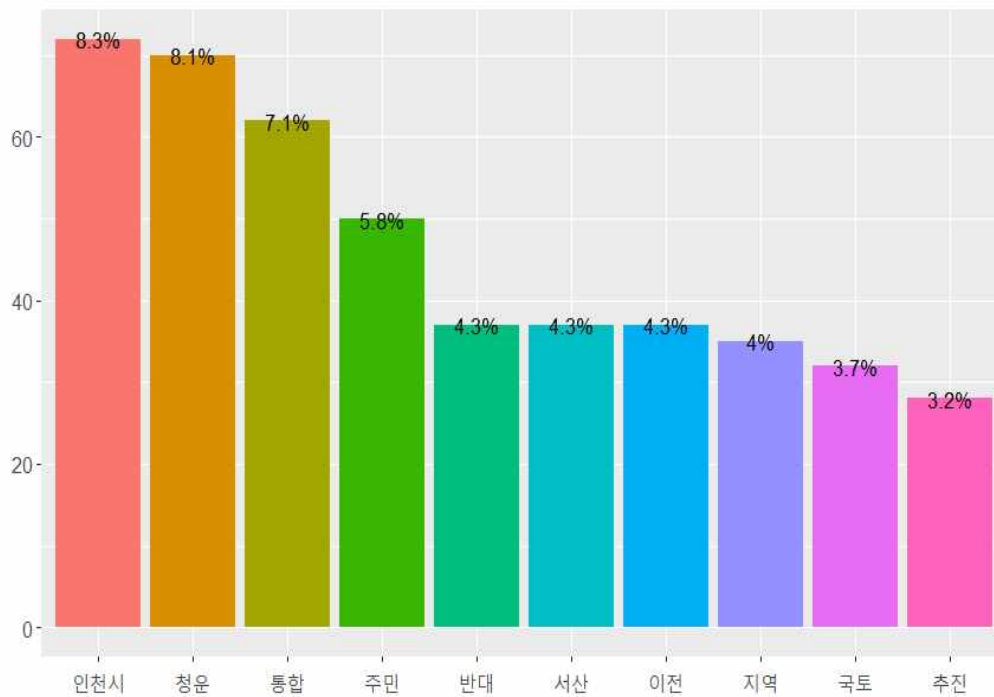


[그림 14] 2012년도 3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4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8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천시(72회), 청운(70회), 통합(62회), 주민(50회), 반대(37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4월은 1월부터 진행되어온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2〉 2012년도 4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인천시	72	8.3%
2	청운	70	8.1%
3	통합	62	7.1%
4	주민	50	5.8%
5	반대	37	4.3%
6	서산	37	4.3%
7	이전	37	4.3%
8	지역	35	4.0%
9	국토	32	3.7%
10	추진	28	3.2%



[그림 15] 2012년도 4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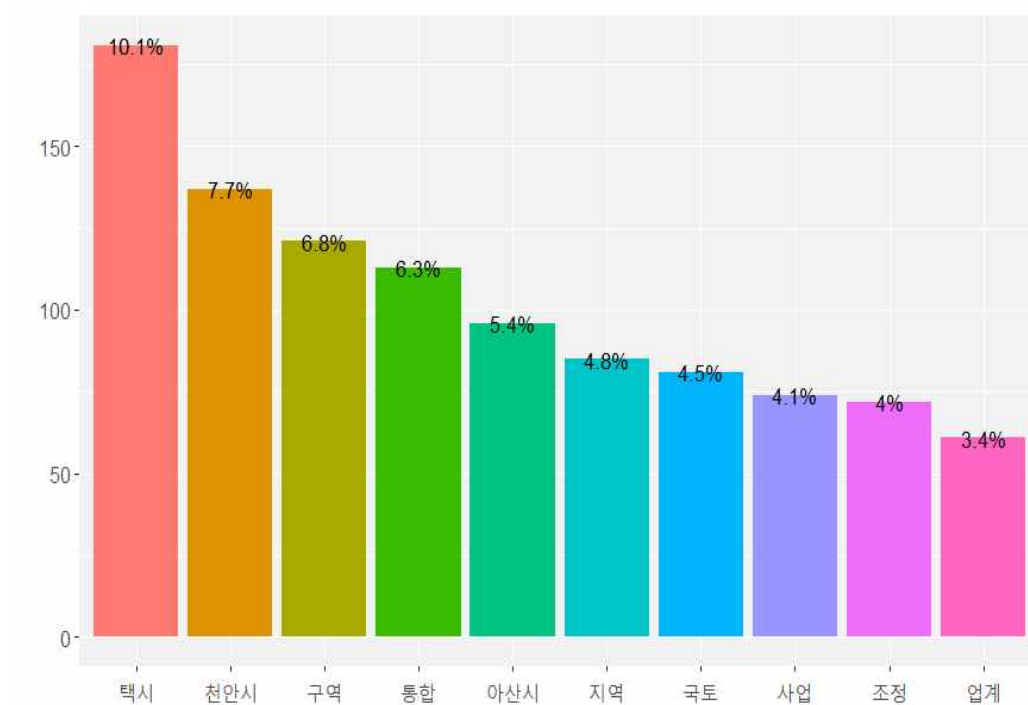


[그림 16] 2012년도 4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5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36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택시(181회), 천안시(137회), 구역(121회), 통합(113회), 아산시(96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5월은 국토해양부가 KTX 천안·아산역 택시 영업권을 놓고 전체구역 통합안을 제시하고 직권 통합을 추진하면서 천안·아산 택시 업계간 갈등이 발생한 ‘천안아산 택시 영업권 구역’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3〉 2012년도 5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택시	181	10.1%
2	천안시	137	7.7%
3	구역	121	6.8%
4	통합	113	6.3%
5	아산시	96	5.4%
6	지역	85	4.8%
7	국토	81	4.5%
8	사업	74	4.1%
9	조정	72	4.0%
10	업계	61	3.4%



[그림 17] 2012년도 5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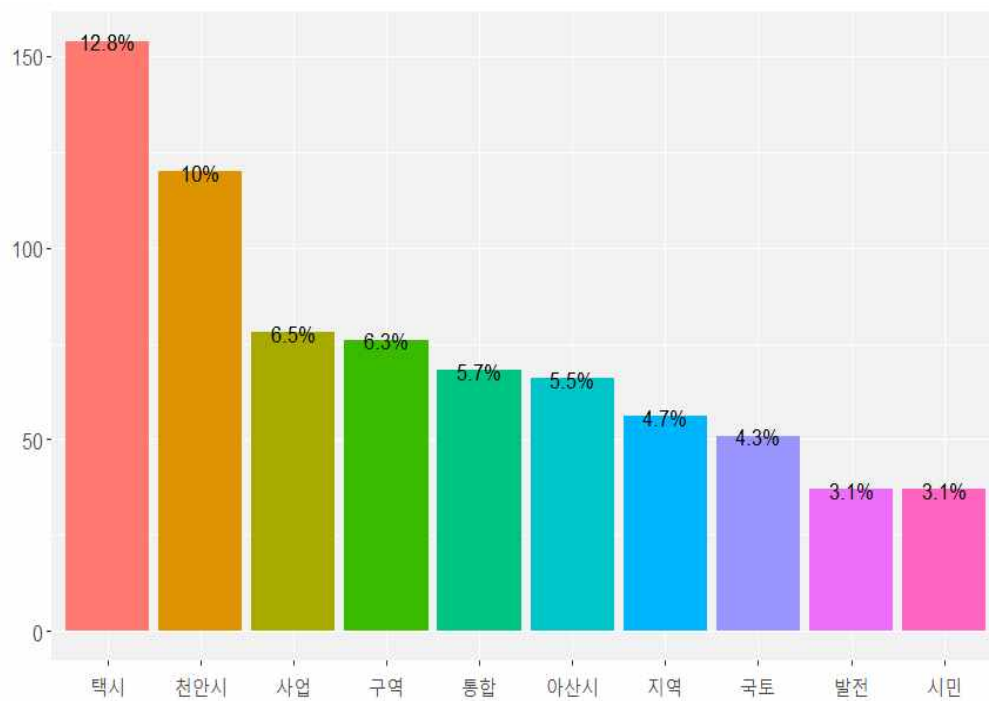


[그림 18] 2012년도 5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6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8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택시(154회), 천안시(120회), 사업(78회), 구역(76회), 통합(68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6월은 5월과 연속하여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구역’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4〉 2012년도 6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택시	154	12.8%
2	천안시	120	10.0%
3	사업	78	6.5%
4	구역	76	6.3%
5	통합	68	5.7%
6	아산시	66	5.5%
7	지역	56	4.7%
8	국토	51	4.3%
9	발전	37	3.1%
10	시민	37	3.1%



[그림 19] 2012년도 6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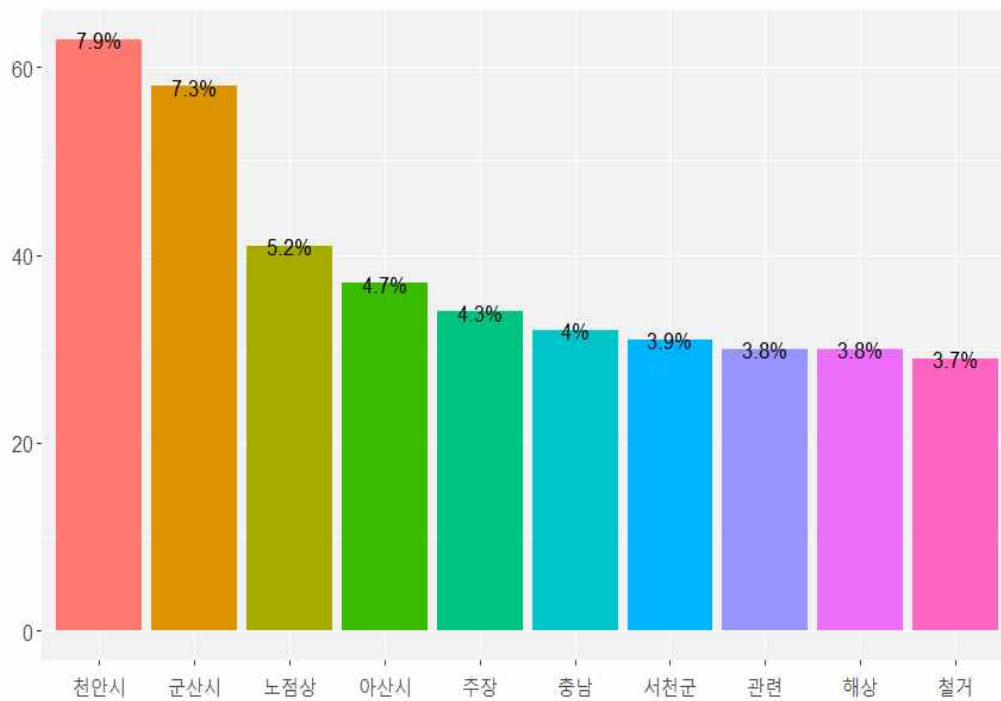


[그림 20] 2012년도 6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7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6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천안시(63회), 군산시(58회), 노점상(41회), 아산시(37회), 주장(34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7월은 천안시가 신부동 터미널 인근에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조성계획에 따라 일대에 위치한 노점상 점포 63개를 이전 및 철거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노점상 철거’ 와 2월부터 진행되어온 ‘금강하굿둑 기수역 복원’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5〉 2012년도 7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천안시	63	7.9%
2	군산시	58	7.3%
3	노점상	41	5.2%
4	아산시	37	4.7%
5	주장	34	4.3%
6	충남	32	4.0%
7	서천군	31	3.9%
8	관련	30	3.8%
9	해상	30	3.8%
10	철거	29	3.7%



[그림 21] 2012년도 7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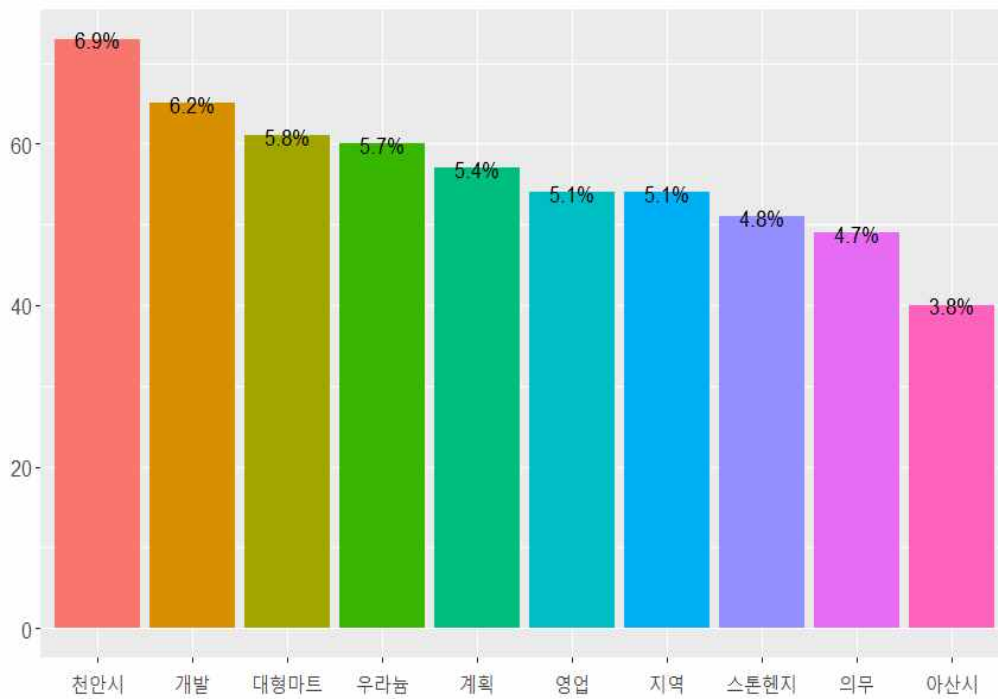


[그림 22] 2012년도 7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8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4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천안시(73회), 개발(65회), 대형마트(61회), 우라늄(60회), 계획(57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8월은 지역내 대규모 유통업체가 줄지어 입점하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의무휴무일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민간 개발업체의 우라늄 및 바나듐 채광계획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의 불허 결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우라늄 광산 개발’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6〉 2012년도 8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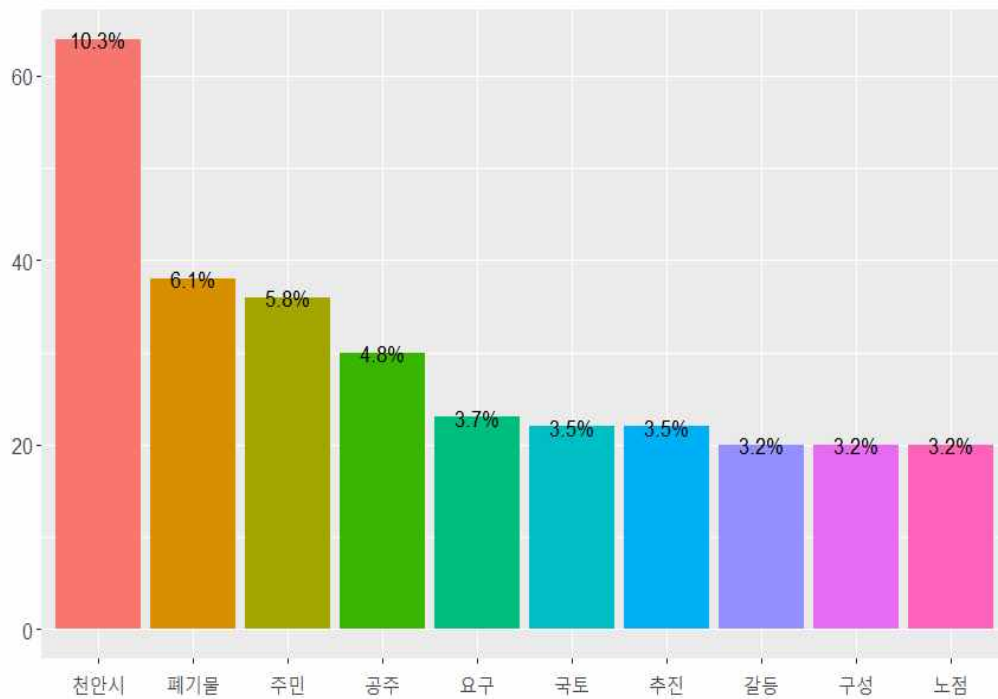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천안시	73	6.9%
2	개발	65	6.2%
3	대형마트	61	5.8%
4	우라늄	60	5.7%
5	계획	57	5.4%
6	영업	54	5.1%
7	지역	54	5.1%
8	스톤헨지	51	4.8%
9	의무	49	4.7%
10	아산시	40	3.8%



2012년도 9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1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천안시(64회), 폐기물(38회), 주민(36회), 공주(30회), 요구(23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9월은 천안시가 관내 제5산업단지를 분양 중 계획변경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변경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계획되어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천안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7〉 2012년도 9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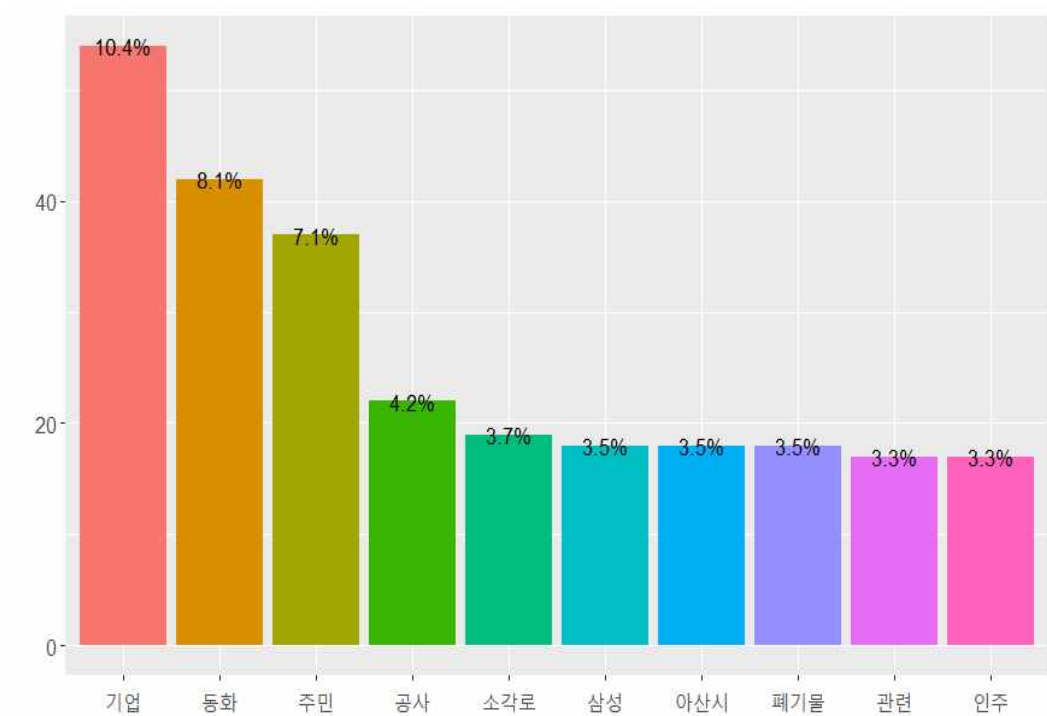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천안시	64	10.3%
2	폐기물	38	6.1%
3	주민	36	5.8%
4	공주	30	4.8%
5	요구	23	3.7%
6	국토	22	3.5%
7	추진	22	3.5%
8	갈등	20	3.2%
9	구성	20	3.2%
10	노점	20	3.2%



2012년도 10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3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54회), 동화(42회), 주민(37회), 공사(22회), 소각로(19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10월은 아산시 인주면 소재 기업에서 공장 및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면서, 불법적 증설추진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한 ‘공장 소각로 증설’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8〉 2012년도 10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기업	54	10.4%
2	동화	42	8.1%
3	주민	37	7.1%
4	공사	22	4.2%
5	소각로	19	3.7%
6	삼성	18	3.5%
7	아산시	18	3.5%
8	폐기물	18	3.5%
9	관련	17	3.3%
10	인주	17	3.3%



[그림 27] 2012년도 10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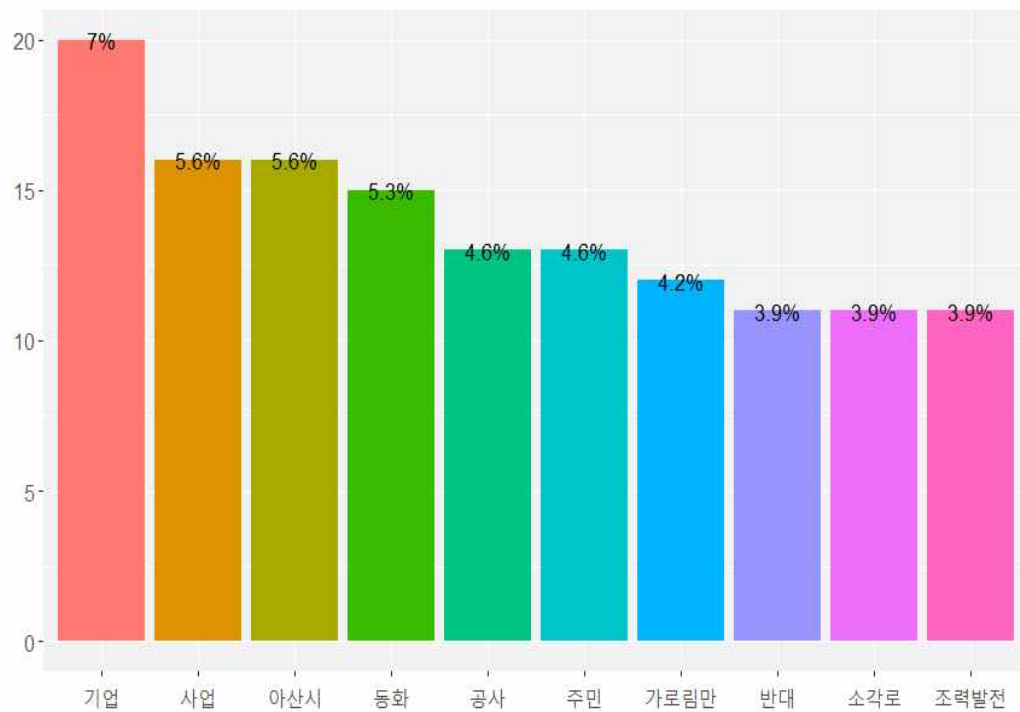


[그림 28] 2012년도 10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11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7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20회), 사업(16회), 아산시(16회), 동화(15회), 공사(13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11월은 10월과 연속하여 ‘공장 소각로 증설’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9〉 2012년도 11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기업	20	7.0%
2	사업	16	5.6%
3	아산시	16	5.6%
4	동화	15	5.3%
5	공사	13	4.6%
6	주민	13	4.6%
7	가로림만	12	4.2%
8	반대	11	3.9%
9	소각로	11	3.9%
10	조력발전	11	3.9%



[그림 29] 2012년도 11월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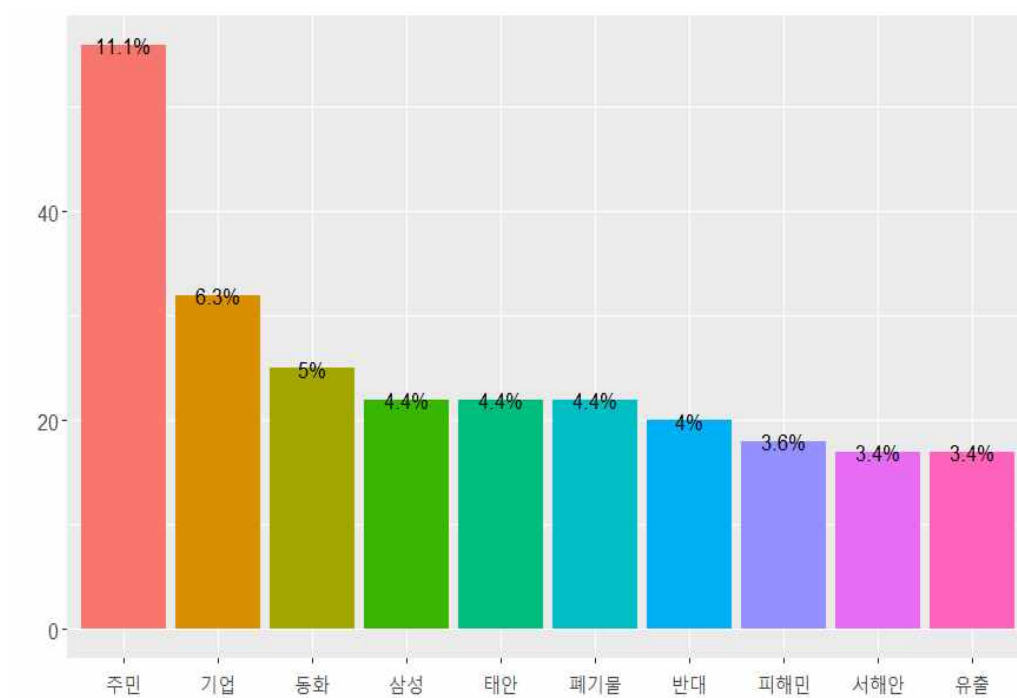


[그림 30] 2012년도 11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012년도 12월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4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56회), 기업(32회), 동화(25회), 태안(22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2012년 12월은 10월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공장 소각로 증설’과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로 업체와 지역민들간 갈등이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보상’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0〉 2012년도 12월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주민	56	11.1%
2	기업	32	6.3%
3	동화	25	5.0%
4	삼성	22	4.4%
5	태안	22	4.4%
6	폐기물	22	4.4%
7	반대	20	4.0%
8	피해민	18	3.6%
9	서해안	17	3.4%
10	유출	1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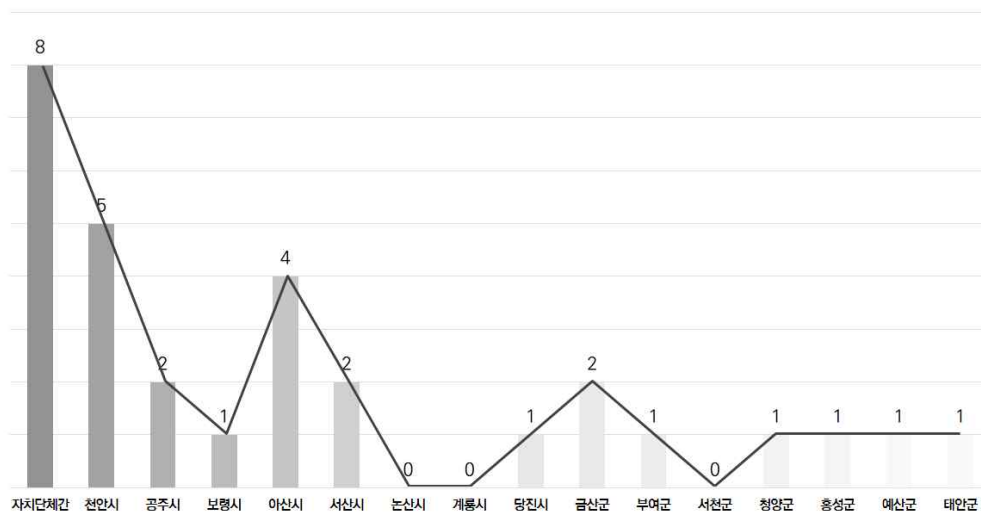
[그림 31] 2012년도 12월 기준 상위 10 단어



[그림 32] 2012년도 12월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2. 지역별 공공갈등 발생

공공갈등 발생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시 5건, 아산시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갈등발생이 도내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발생의 빈도는 도내에서 인구밀도와 개발속도가 높은 시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2012년 지역별 공공갈등 발생 건수

충청남도 지역별 공공 갈등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총 325건 중 83건으로 천안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산시(66건), 서천군(31건), 홍성군(30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갈등 관련 기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1건)이다.

〈표 21〉 지역별 활용 기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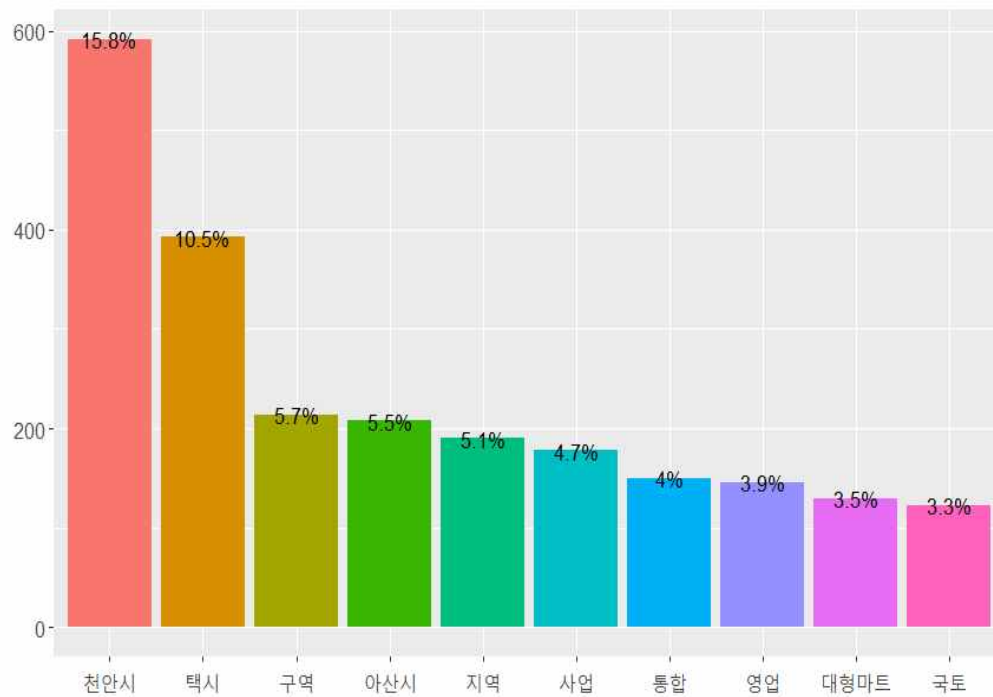
지역	기사건수
천안시	83
공주시	9
보령시	10
아산시	66
서산시	27
논산시	4
계룡시	4
당진시	14
금산군	10
부여군	2
서천군	31
청양군	1
홍성군	30
예산군	10
태안군	24
총 합계	325

※ 자치단체 간 갈등에 해당하는 기사 60건 중복 활용

충청남도 천안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83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천안시(592회), 택시(393회), 구역(214회), 아산시(208회), 지역(190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천안시는 국토해양부가 KTX 천안·아산역 택시 영업권을 놓고 전체구역 통합안을 제시하고 직권 통합을 추진하면서 천안·아산 택시업계간 갈등이 발생한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구역’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2〉 천안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천안시	592	15.8%
2	택시	393	10.5%
3	구역	214	5.7%
4	아산시	208	5.5%
5	지역	190	5.1%
6	사업	178	4.7%
7	통합	150	4.0%
8	영업	146	3.9%
9	대형마트	130	3.5%
10	국토	123	3.3%



[그림 34] 천안시 기준 상위 10 단어



[그림 35] 천안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공주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9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주(88회), 변경(60회), 교명(57회), 천안시(33회), 명칭(26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공주시는 공주대학교와 천안공대의 통합 당시 통합 대학교명을 제3의 명칭으로 정한다는 합의서 이행을 놓고 지역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공주대학교 교명’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3〉 공주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공주	88	18.1%
2	변경	60	12.3%
3	교명	57	11.7%
4	천안시	33	6.8%
5	명칭	26	5.3%
6	대학교	17	3.5%
7	지역	14	2.9%
8	구성	13	2.7%
9	추진	13	2.7%
10	주민	12	2.5%



[그림 36] 공주시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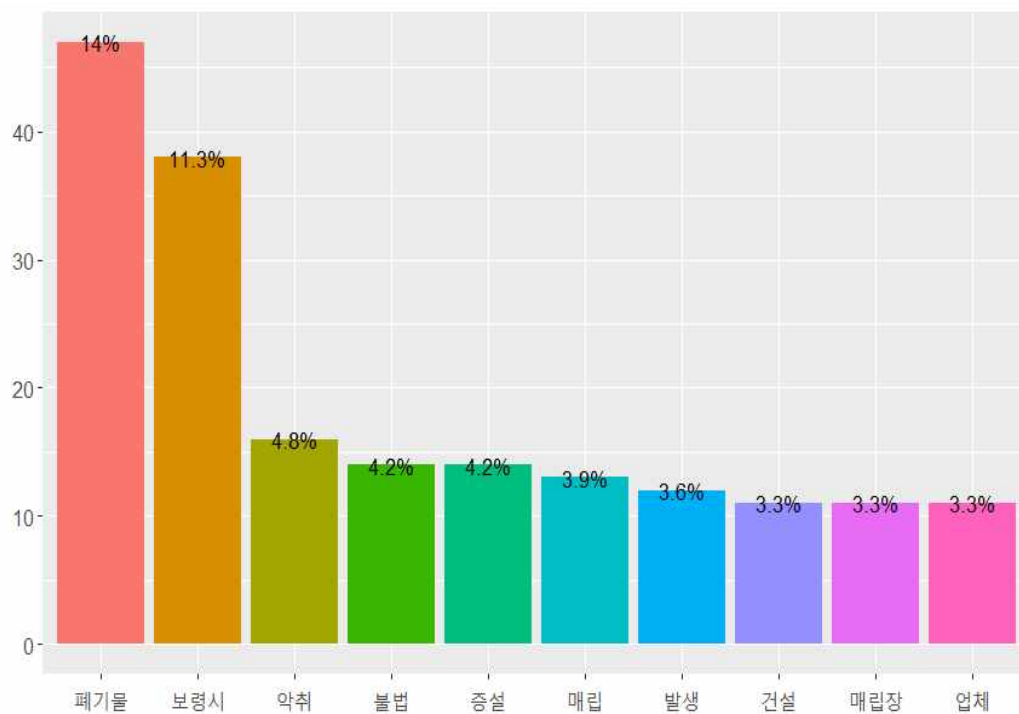


[그림 37] 공주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보령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0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폐기물(47회), 보령시(38회), 악취(16회), 불법(14회), 증설(14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보령시는 관내에 운영중인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매립장 사용년한인 2014년에 맞추어 추가 운영을 위한 증설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된 ‘폐기물 매립장 추가 증설’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4〉 보령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폐기물	47	14.0%
2	보령시	38	11.3%
3	악취	16	4.8%
4	불법	14	4.2%
5	증설	14	4.2%
6	매립	13	3.9%
7	발생	12	3.6%
8	건설	11	3.3%
9	매립장	11	3.3%
10	업체	11	3.3%



[그림 38] 보령시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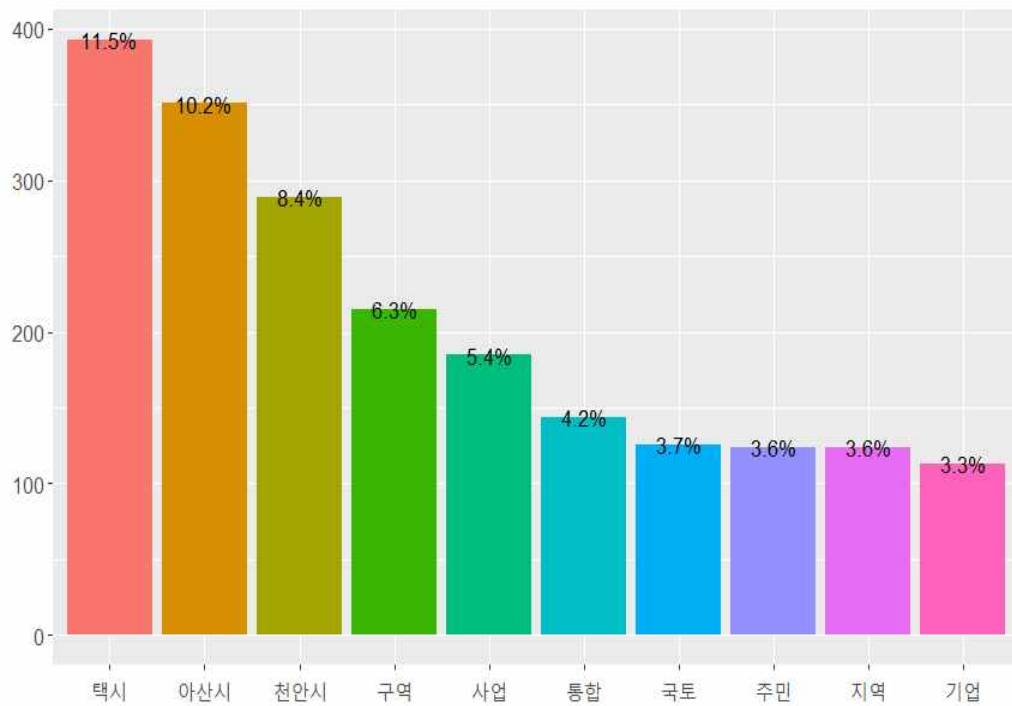


[그림 39] 보령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아산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66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택시(393회), 아산시(351회), 천안시(289회), 구역(289회), 사업(185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아산시는 천안시와 동일하게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구역’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5〉 아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택시	393	11.5%
2	아산시	351	10.2%
3	천안시	289	8.4%
4	구역	215	6.3%
5	사업	185	5.4%
6	통합	144	4.2%
7	국토	126	3.7%
8	주민	124	3.6%
9	지역	124	3.6%
10	기업	113	3.3%



[그림 40] 아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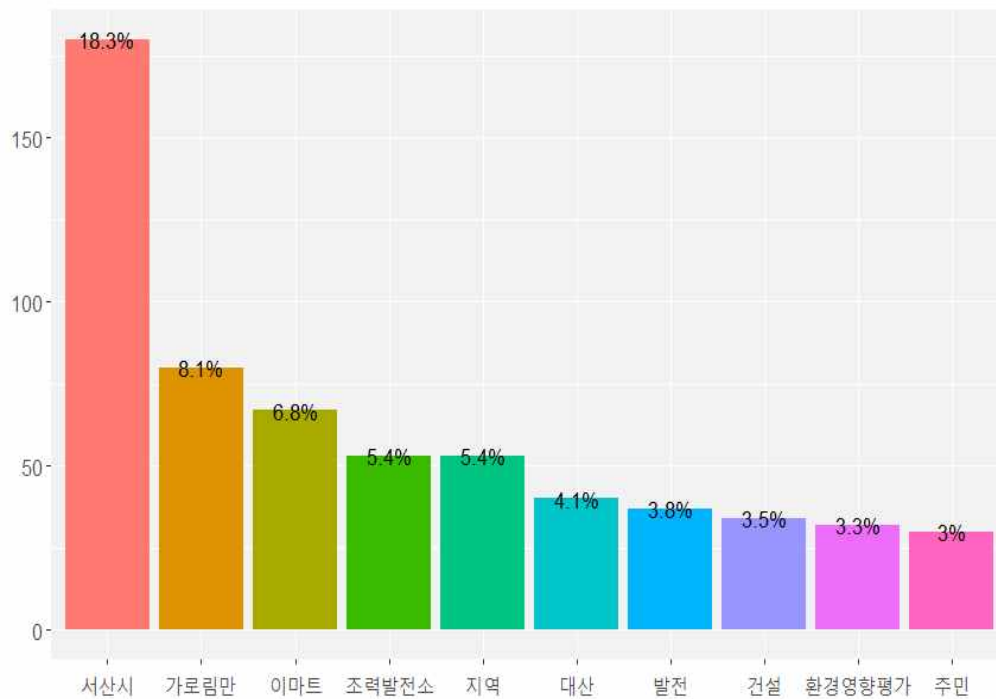


[그림 41] 아산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서산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7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산시(180회), 가로림만(80회), 이마트(67회), 조력발전소(53회), 지역(53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서산시는 태안군과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 지역에 조력발전소 입지가 예정되면서, 개발과 보존으로 지역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6〉 서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서산시	180	18.3%
2	가로림만	80	8.1%
3	이마트	67	6.8%
4	조력발전소	53	5.4%
5	지역	53	5.4%
6	대산	40	4.1%
7	발전	37	3.8%
8	건설	34	3.5%
9	환경영향평가	32	3.3%
10	주민	30	3.0%



[그림 42] 서산시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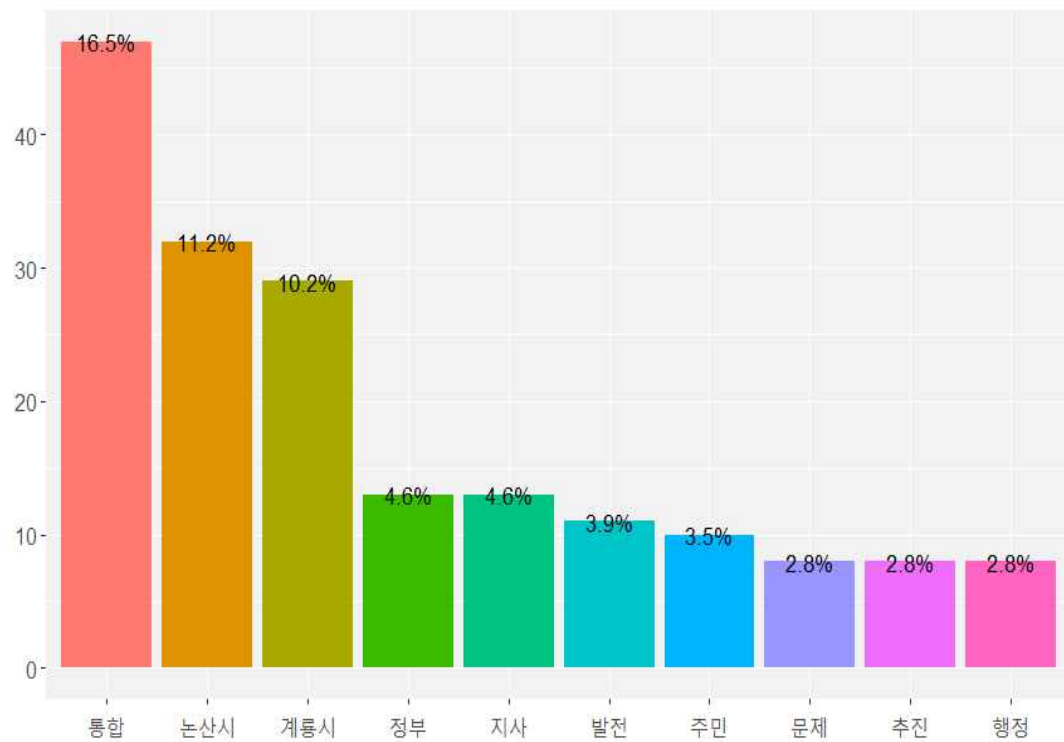


[그림 43] 서산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4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합(47회), 논산시(32회), 계룡시(29회), 정부(13회), 지사(13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논산시·계룡시는 논산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산시, 계룡시간 통합 건의서 제출을 두고, 계룡시 주민들이 논산시의 일방적 통합추진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논산-계룡 행정구역 통합’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7〉 논산시·계룡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통합	47	16.5%
2	논산시	32	11.2%
3	계룡시	29	10.2%
4	정부	13	4.6%
5	지사	13	4.6%
6	발전	11	3.9%
7	주민	10	3.5%
8	문제	8	2.8%
9	추진	8	2.8%
10	행정	8	2.8%



[그림 44] 논산시·계룡시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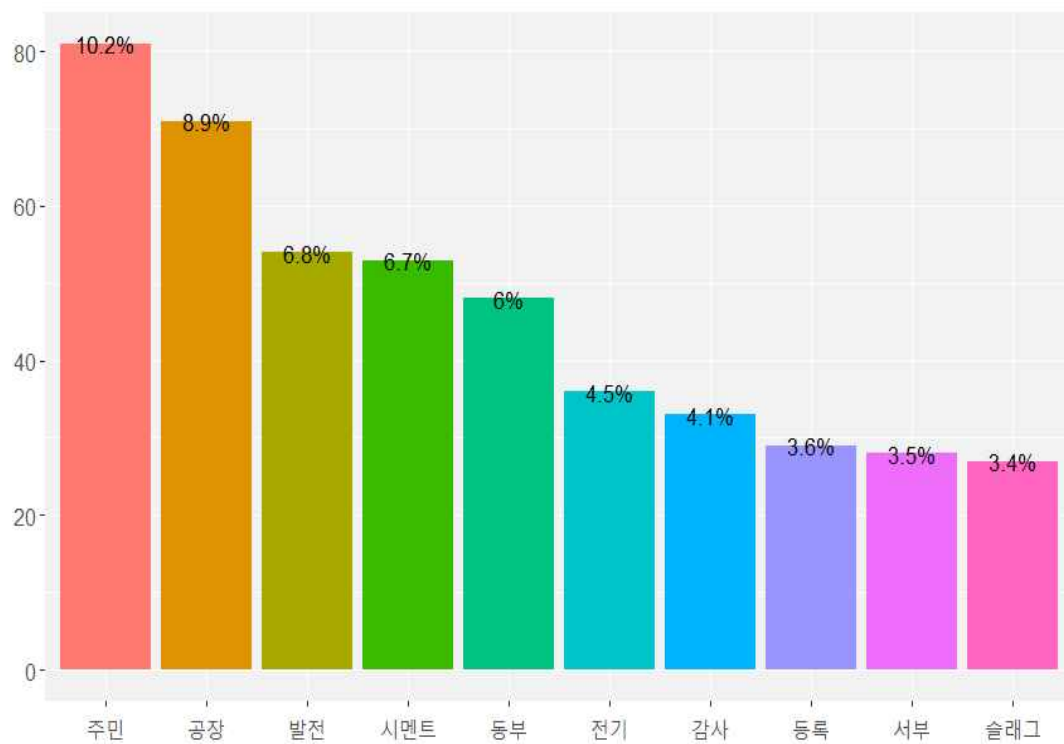


[그림 45] 논산시·계룡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당진시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4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81회), 공장(71회), 발전(54회), 시멘트(53회), 동부(48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당진시는 당진 소재의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인해 인근 평택시 거주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발생이 발생한 ‘시멘트 분진 환경피해’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8〉 당진시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주민	81	10.2%
2	공장	71	8.9%
3	발전	54	6.8%
4	시멘트	53	6.7%
5	동부	48	6.0%
6	전기	36	4.5%
7	감사	33	4.1%
8	등록	29	3.6%
9	서부	28	3.5%
10	슬래그	27	3.4%



[그림 46] 당진시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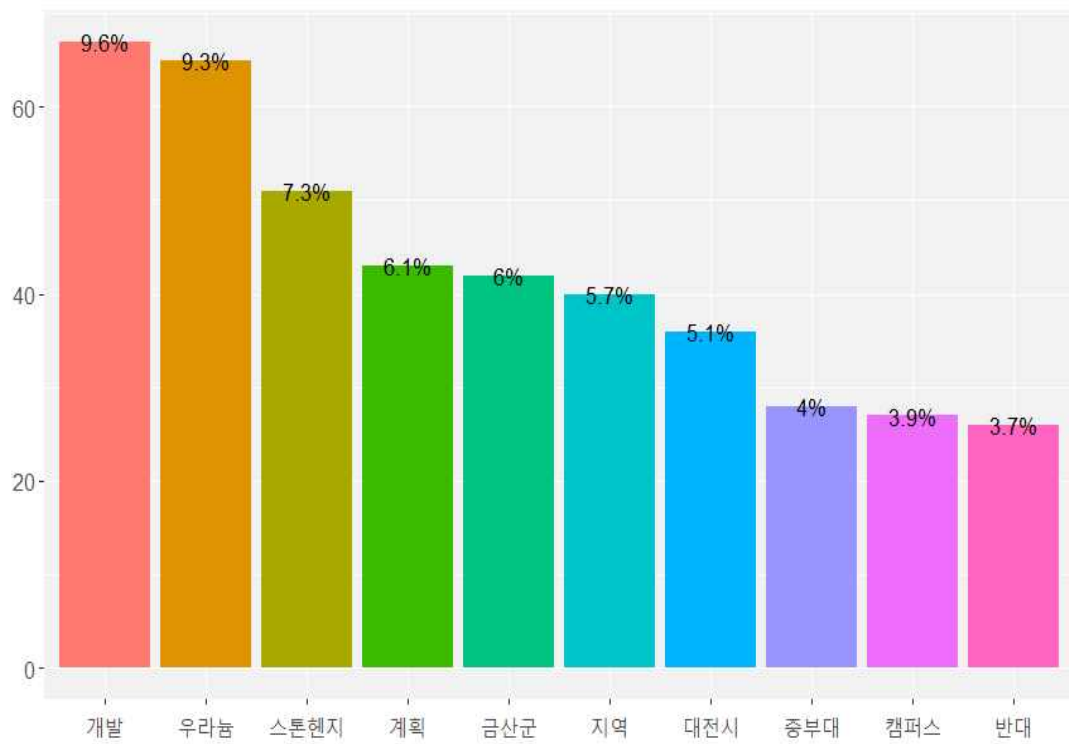


[그림 47] 당진시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금산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0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발(67회), 우라늄(65회), 스톤헨지(51회), 계획(43회), 금산군(42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금산군은 민간 개발업체의 우라늄 및 바나듐 채광계획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의 불허 결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우라늄 광산 개발’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9〉 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개발	67	9.6%
2	우라늄	65	9.3%
3	스톤헨지	51	7.3%
4	계획	43	6.1%
5	금산군	42	6.0%
6	지역	40	5.7%
7	대전시	36	5.1%
8	중부대	28	4.0%
9	캠퍼스	27	3.9%
10	반대	26	3.7%



[그림 48] 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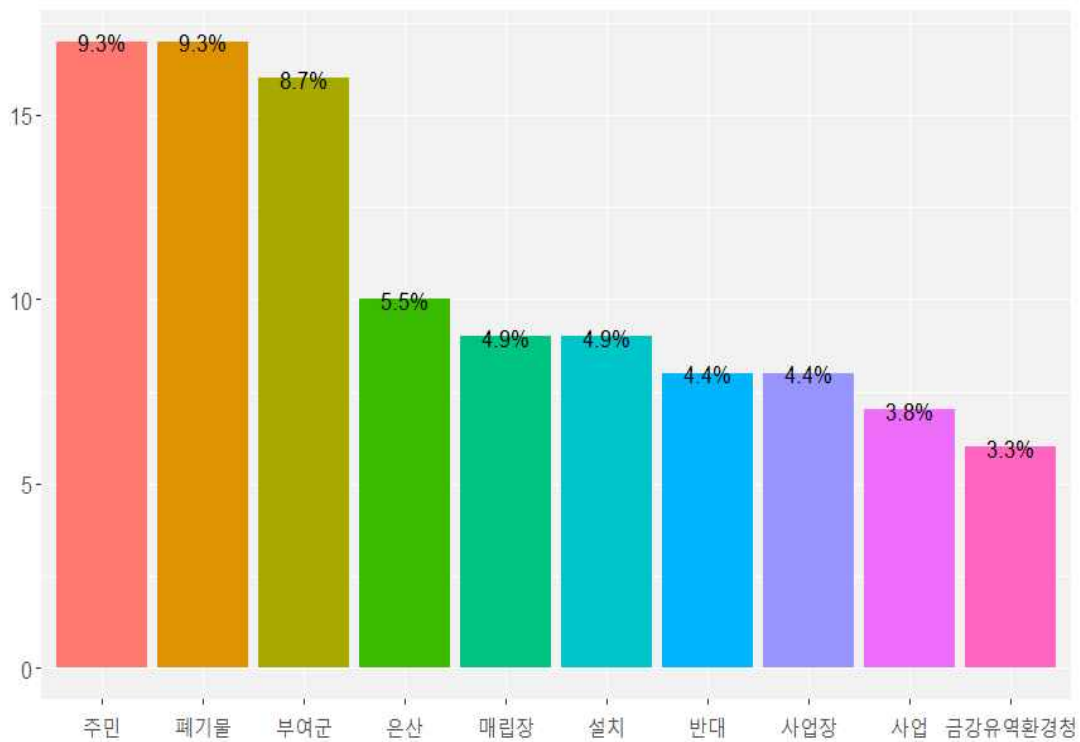


[그림 49] 금산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부여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17회), 폐기물(17회), 부여군(16회), 은산(10회), 매립장(9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부여군은 은산면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예정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0〉 부여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주민	17	9.3%
2	폐기물	17	9.3%
3	부여군	16	8.7%
4	은산	10	5.5%
5	매립장	9	4.9%
6	설치	9	4.9%
7	반대	8	4.4%
8	사업장	8	4.4%
9	사업	7	3.8%
10	금강유역환경청	6	3.3%



[그림 50] 부여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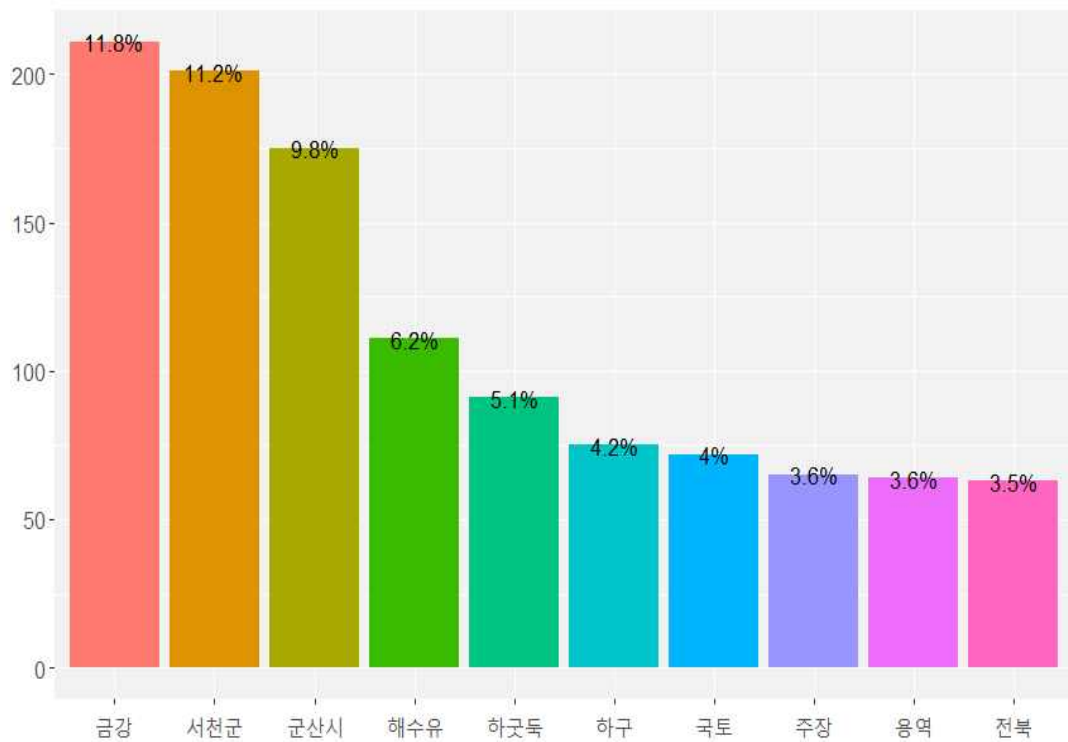


[그림 51] 부여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서천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31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금강(211회), 서천군(201회), 군산시(175회), 해수유(111회), 하굿둑(91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서천군은 금강하구둑 건설에 관하여 금강 수질악화와 연안수산업의 황폐화 및 장항항의 기능상실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증설로 해수유통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대안 미비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 ‘금강하굿둑 기수역 복원’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1〉 서천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금강	211	11.8%
2	서천군	201	11.2%
3	군산시	175	9.8%
4	해수유	111	6.2%
5	하굿둑	91	5.1%
6	하구	75	4.2%
7	국토	72	4.0%
8	주장	65	3.6%
9	용역	64	3.6%
10	전북	63	3.5%



[그림 52] 서천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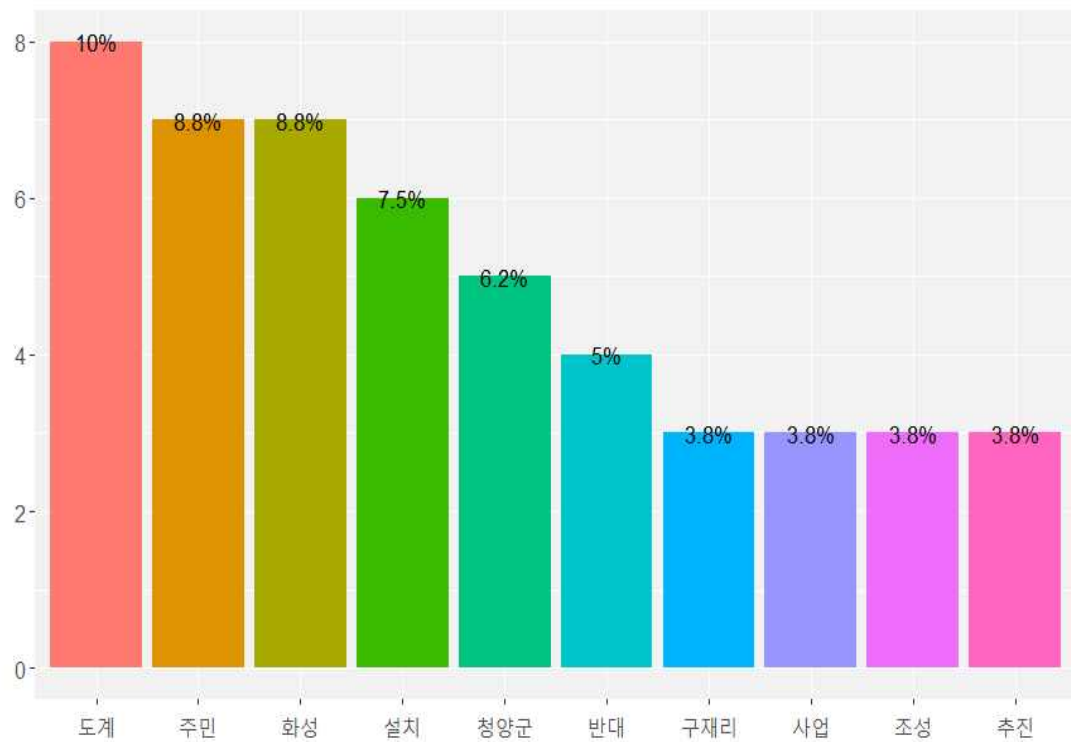


[그림 53] 서천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청양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계(8회), 주민(7회), 화성(7회), 설치(6회), 청양군(5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청양군은 화성면에 도계장 입지가 예정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갈등이 발생한 ‘도계장 설치’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2〉 청양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도계	8	10.0%
2	주민	7	8.8%
3	화성	7	8.8%
4	설치	6	7.5%
5	청양군	5	6.2%
6	반대	4	5.0%
7	구재리	3	3.8%
8	사업	3	3.8%
9	조성	3	3.8%
10	추진	3	3.8%



[그림 54] 청양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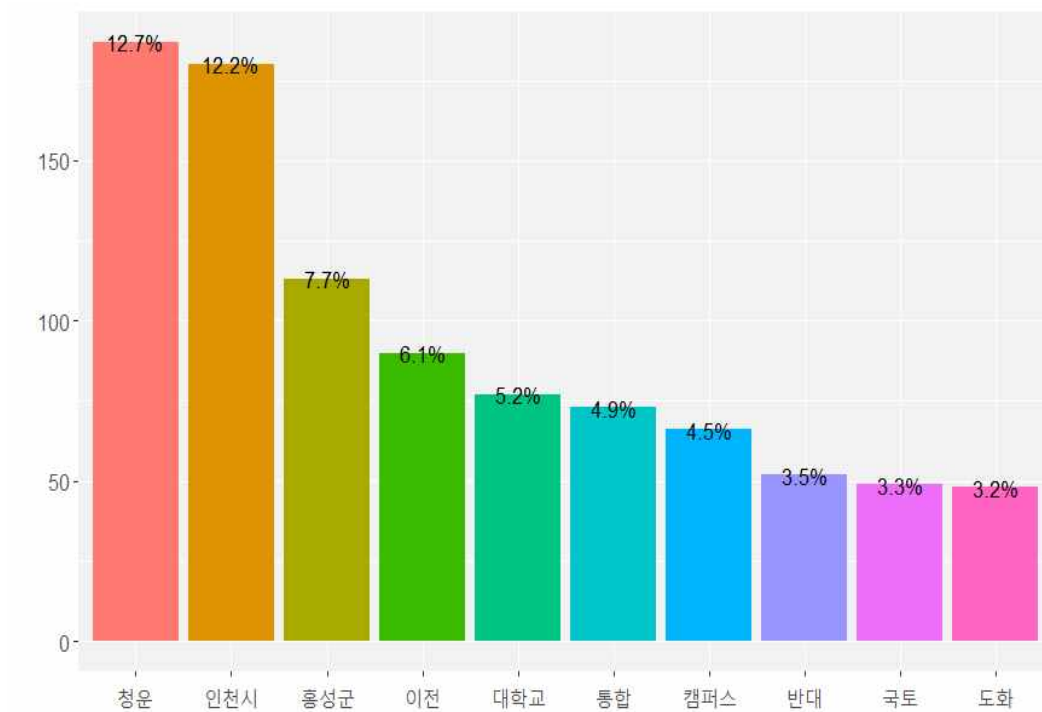


[그림 55] 청양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홍성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30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운(187회), 인천시(180회), 홍성군(113회), 이전(90회), 대학교(77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홍성군은 관내에 위치한 청운대학교가 인천시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표출되며 갈등이 발생한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3〉 홍성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청운	187	12.7%
2	인천시	180	12.2%
3	홍성군	113	7.7%
4	이전	90	6.1%
5	대학교	77	5.2%
6	통합	73	4.9%
7	캠퍼스	66	4.5%
8	반대	52	3.5%
9	국토	49	3.3%
10	도화	48	3.2%



[그림 56] 홍성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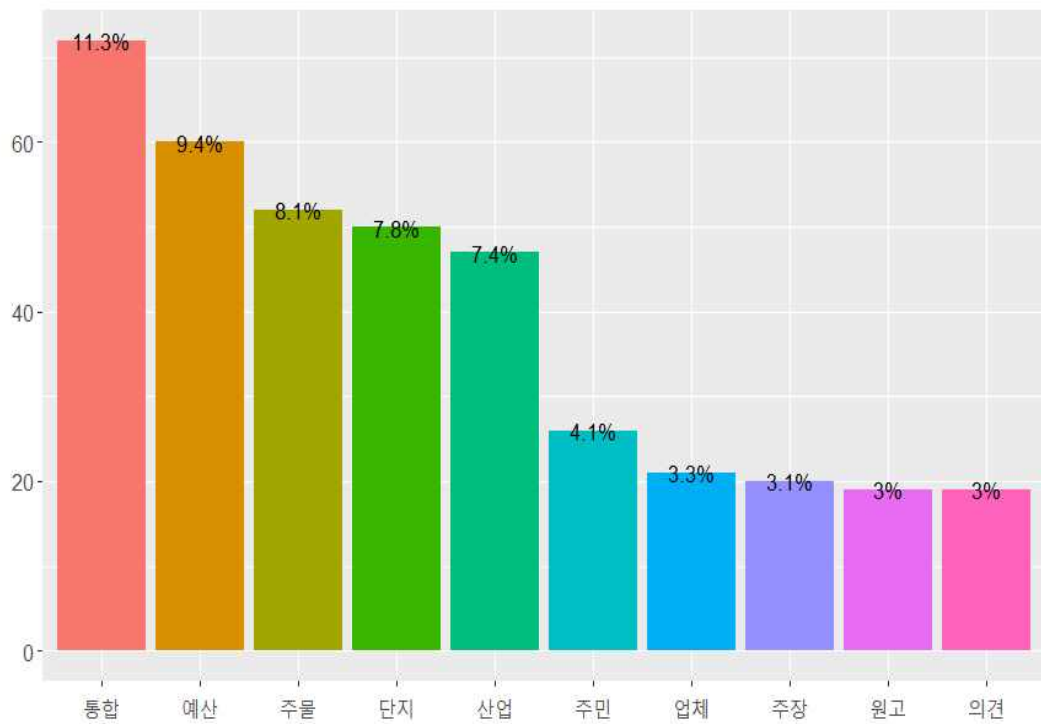


[그림 57] 홍성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예산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10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합(72회), 예산(60회), 주물(52회), 단지(50회), 산업(47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예산군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가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을 강제 통합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과 예산군에 조성예정인 산업단지가 명칭과는 다르게 주물산업 업체의 입지가 예정되면서 주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한 ‘신소재산업단지 입지’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4〉 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통합	72	11.3%
2	예산	60	9.4%
3	주물	52	8.1%
4	단지	50	7.8%
5	산업	47	7.4%
6	주민	26	4.1%
7	업체	21	3.3%
8	주장	20	3.1%
9	원고	19	3.0%
10	의견	19	3.0%



[그림 58] 예산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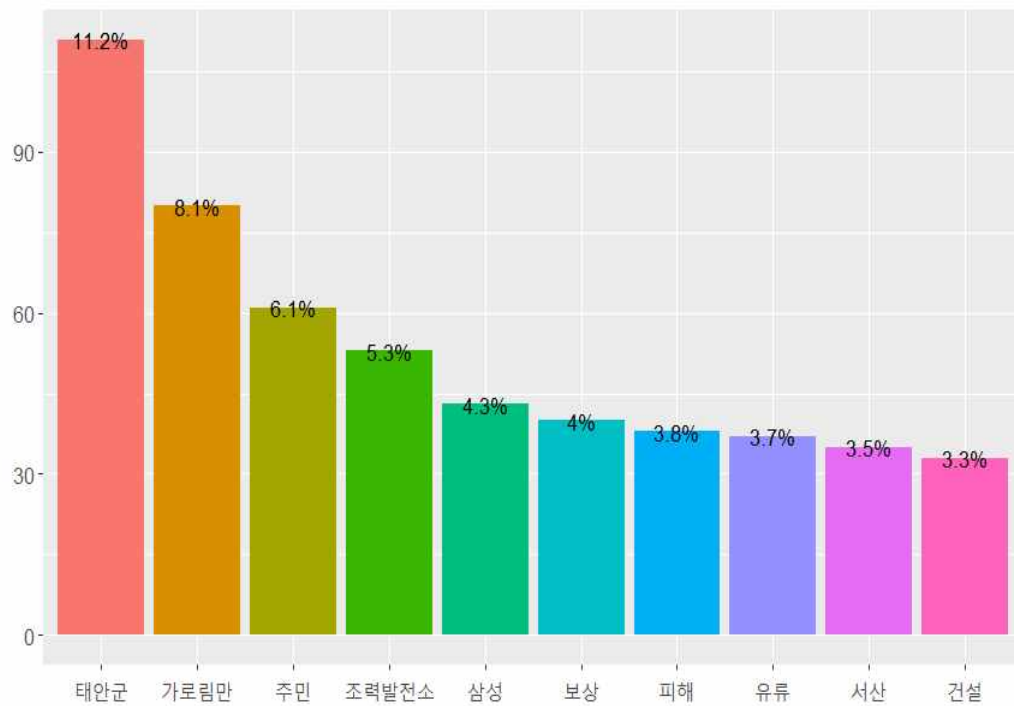


[그림 59] 예산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충청남도 태안군의 공공갈등을 내용으로 한 24건의 기사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태안군(111회), 가로림만(80회), 주민(61회), 조력발전소(53회), 삼성(43회) 등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다. 빈도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태안군은 서산시와 동일하게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과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로 업체와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보상’에 관하여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5〉 태안군 기준 상위 10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태안군	111	11.2%
2	가로림만	80	8.1%
3	주민	61	6.1%
4	조력발전소	53	5.3%
5	삼성	43	4.3%
6	보상	40	4.0%
7	피해	38	3.8%
8	유류	37	3.7%
9	서산	35	3.5%
10	건설	33	3.3%



[그림 60] 태안군 기준 상위 10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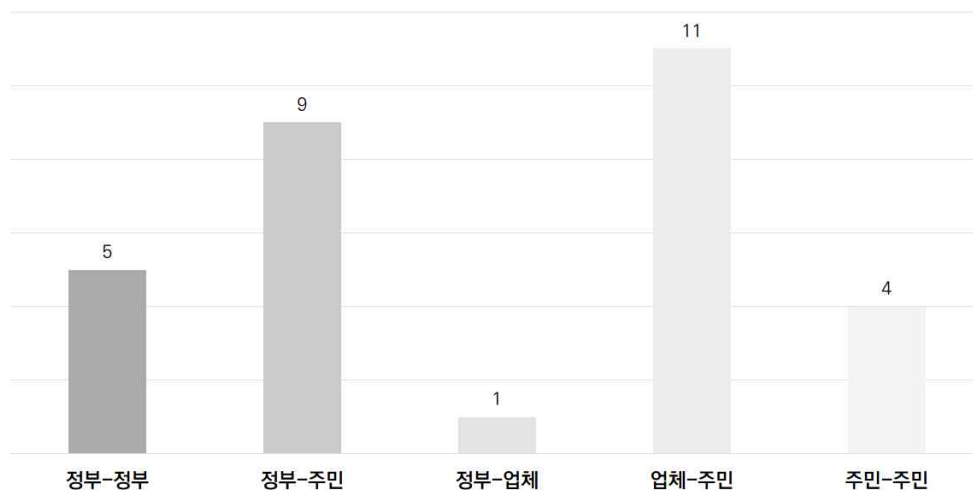
[그림 61] 태안군 상위 30 워드클라우드

3. 주체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자 주체별 발생을 살펴보면 업체-주민간 갈등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주민간 9건 정부-정부간 갈등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주민간, 정부-주민간 갈등이 가장 높은 것은 업체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장 입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 업체의 사업제한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승인될 경우 환경오염, 정주권 훼손, 경제적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고 증폭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정책 설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함으로써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사표현이 강해지고 집단화 되면서 앞으로 많은 발생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정부간 갈등은 자치단체간 경계설정, 행정구역 통합 등 자치권의 신장과 지역 주민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자치단체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주체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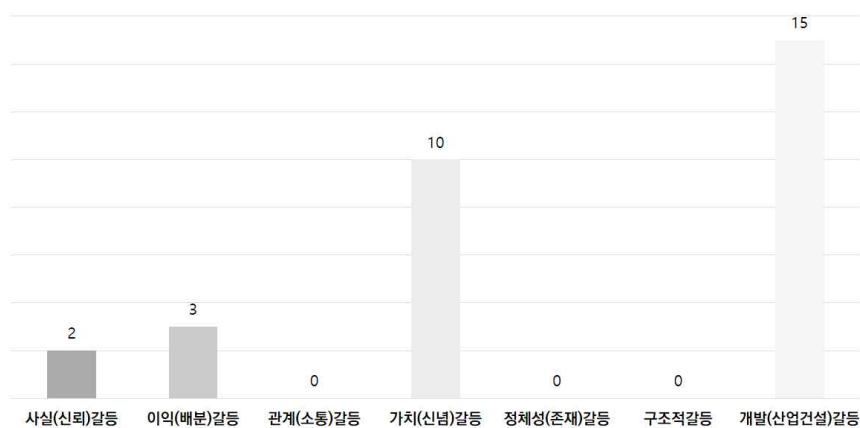
4. 원인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공공갈등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산업건설) 갈등이 15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신념)갈등 10건, 이익(배분) 갈등 3건, 사실(실패) 갈등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산업건설) 갈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입지로 인한 갈등과 업체의 사업장 입지로 인한 갈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입지이나, 비선호시설(소각장, 폐수처리장, 산업단지 등)의 입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장 입지갈등 사례는 대규모 축산업, 위험물 보관소 등 주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신념) 갈등의 사례들은 행정구역 통합, 학교교명 변경, 학교 이전 등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나타난 갈등으로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표출되지는 않으나, 미래에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한 의견표현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

사실(실패) 갈등은 정책 운영, 사업장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나타내면서 제기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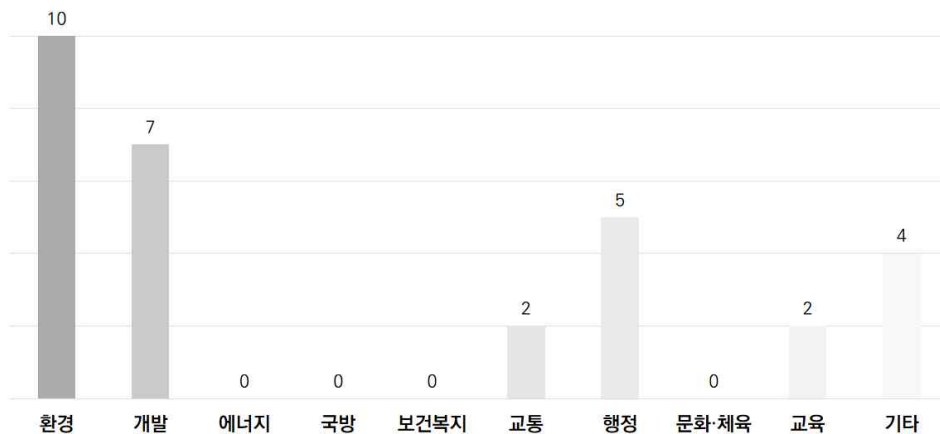
[그림 63] 원인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5. 유형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유형별 공공갈등 발생을 살펴본 결과 환경 갈등이 1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발 7건, 행정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갈등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에서는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호소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 유형은 대부분 정책, 사업 추진과정, 집행과정에서 시행자(정부, 업체)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과정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와 타협의 과정이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정책, 사업 집행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참여제한, 관련정보 비공개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또한 환경오염, 주변지역 훼손 등 각 주체들의 입장차이가 명확하게 다른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유형은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적 예방과 함께 사후적 해결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 개발 갈등의 경우 명확한 타당성 판단이나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이 우려되는 이러한 갈등 유형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의형성 구조와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64] 유형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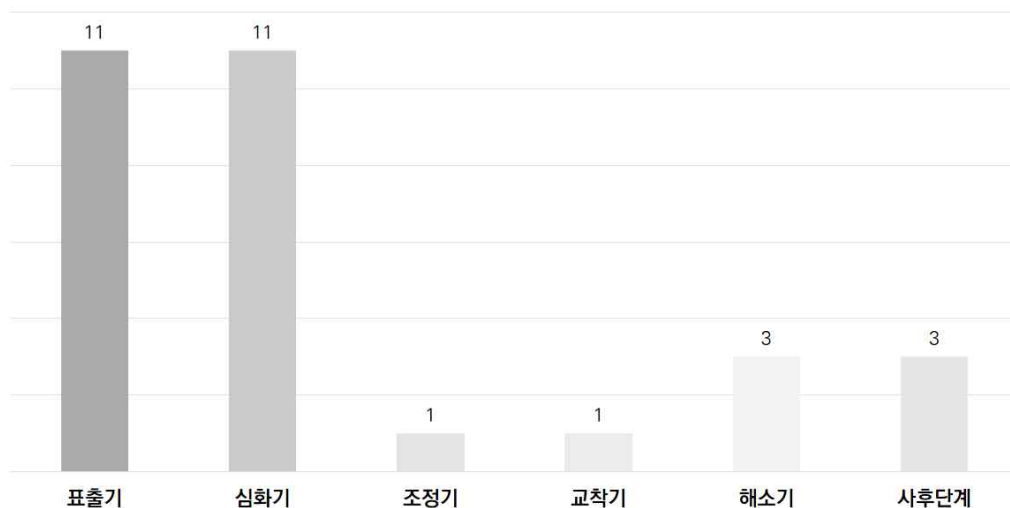
6. 단계별 공공갈등 발생 분석

공공갈등 발생을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표출기와 심화기가 각 11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표출단계에서는 갈등현안에 대한 인지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표출이 시작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 단계에서 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자 파악을 통해 사전적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의 심화기 단계에서는 갈등과 관련된 반대 행동들이 집단화되고 증폭되고 있었다. 갈등의 원인 자체가 분명하게 이슈화 되고 있었으며,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정보의 왜곡, 불균형, 신뢰관계의 저하 등 감정적 상태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해소기와 사후단계인 갈등도 각 3건씩 나타났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갈등의 해결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갈등이 재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65] 단계별 공공갈등 발생 빈도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제안된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활용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2012년 충청남도에서는 총 30건의 공공갈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별로는 1월이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다가 연말인 12월에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정보체계 모델의 활용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실시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2012년 한해 주민, 지역, 택시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로 분석되었다. 2012년은 택시사업구역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었던 한해로 나타났다.

지역별 갈등발생을 분석한 결과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등 도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있고,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주체별로는 업체-주민간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갈등의 원인으로는 개발(산업건설)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유형으로는 환경과 개발과 관련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갈등의 단계는 표출기와 심화기가 가장 많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갈등정보체계 모형 재구축과 활용방안을 찾고자 확장성을 탐색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책방향성 제시, 갈등해결을 위한 자료로써 합리적인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현재의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보도 자료 등 2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대응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 그 자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갈등규모가 작거나 언론의 관심이 적은 갈등사례의 경우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특히 지역 간 갈등의 경우 지역 언론기관마다 입장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해 갈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갈등상황의 변화 감지와 불확실성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제1절 연구의 결론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달성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와 주민의 참여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갈등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갈등은 증가 추세는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훼손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속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공공갈등은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제도 구축, 정책변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은 법제도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공공갈등은 점점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역량강화, 정보 균형, 사회적 문화형성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갈등 및 갈등정보체계와 연계된 이론적 검토와 기존 충청남도 갈등관리모형을 재구성하고, 활용방안 탐색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갈등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적 수단으로 정보 자원 구축과 활용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갈등정보체계 모형’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체계적 분석과 현장중심적 적용과 운영을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갈등 이해관계자, 업무담당자들이 갈등의 발생과 대처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갈등대처 및 해소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이고 충돌적인 행태가 아닌 대화 중심의 협력적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심을 두었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왜곡,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중이며, 업무담당자들은 선행사례에 대한 인지와 학습이 어려워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갈등사례에 대한 기본정보 및 갈등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갈등정보체계의 구축이 좀 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갈등정보체계는 갈등사례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갈등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통해 향후 시스템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갈등정보체계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설계된 여러 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촉진하고 갈등 당사자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등을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중립자, 조정자 등과 같은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가 축적된다면 사회변동에 따른 갈등유형과 갈등양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방향

1) 갈등정보체계 접근의 보편화

공공갈등은 시대적 변화의 사회적 변화의 흐름속에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갈등의 한 유형이 되었으며, 다양화·복잡화 되고 있다. 공공갈등의 진행속에서 정보의 불균형은 소통의 부재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갈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정보체계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이해관계자,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구축된 정보의 외부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정보체계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존재한다고 하면 공익적 관점에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갈등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갈등정보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는 언론보도 자료, 내부자료 등 2차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정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 그 자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공공재로써의 갈등정보체계의 공개는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와 함께 이용자의 평가를 통한 품질 개선도 가능하다.

2) 현장중심형 갈등정보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갈등정보체계는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2차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행과정에서도 기초자료의 수집 어려움과 수집된 자료의 왜곡은 사례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갈등정보체계는 불확실성이 높은 갈등진행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실시간 또는 현장중심의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자료의 수정이 필요하다.

3) 장기적 갈등정보체계 구축

갈등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수집, 활용, 운영을 위한 구축 주체의 비교적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갈등정보 구축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상황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험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주관적 분류에 의해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갈등정보체계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지침서 역할과 과거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성과물은 충청남도의 갈등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단년도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로써 갈등현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갈등유형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구축되고 관리된다면 유용한 공공갈등 사례 데이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활용 방안

1) 충남형 공공갈등정보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한 갈등정보체계 모형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충남형 공공갈등관리 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충남형 갈등정보체계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로 일반적인 공공정보 구축 환경과는 달리 공공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의한 정보의 입력·수집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초 데이터 수집에 막대한 예산과 활용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갈등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공공갈등과 관련된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정책지도 구축,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운영 등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공공갈등관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갈등관리의 경험성 증대

갈등정보체계의 활용은 갈등의 사회적 역기능과 비용 감소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충청남도나 데이터베이스 구축기관의 정보 구축 방식은 사례별 분석으로만 접근되고 있어 갈등의 주요 경험과 시사점은 축적되지 않고 쉽게 활용이 불가능한 경향이 있어 유사 갈등이 반복되거나, 악화되어 확대·재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갈등관리가 보다 과학적 관리체계에 의한 실체적, 경험적 방식에 근거한 관리가 이루

어제야함을 의미한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양과 속도 그리고 다양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료기반 의사결정의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 성향이 강한 정책의 집행과 적용에 갈등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 및 이념갈등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고, 공공 갈등관리과정의 사례와 사실에 기초한 검증을 통해 공공갈등관리의 과학화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갈등관리의 효율성 증대

갈등정보체계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시스템 중 일부로 구축된다면, 그 동안 각 실무부서나 기관별로 분산 되어 있던 갈등관련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게 되며 향후 중요한 정책 데이터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갈등이 발생될 때마다 산발적이며 불규칙적으로 대응하던 대응 방식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갈등의 사안이 미연에 해결되거나 그 규모를 경감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갈등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나 제도들에 대한 데이터적 접근이 조직별로 한정된 정보공유나 개방이 조직 경계를 넘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공유하고 개방하여, 보다 많은 정책갈등 관련 행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데이터 축적, 유지, 관리, 활용이 순환구조로 이어진다면 공공갈등 관리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사례에 기반한 정보가 갈등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한다면, 향후 공공갈등을 예측·예방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모형적용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갈등정보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충남형 갈등정보체계 구축 모형 제시를 통해 기존에 미비했던 공공갈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 및 시스템 검토, 전문가 인터뷰 등 질적 방법을 통해 모형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공공갈등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필수적인 요구조건은 정보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사례 연구에서는 갈등정보체계의 분류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 간 내적 일관성 등 양적 분석 방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분석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사례 분석을 통한 실제 데이터 획득, 그리고 이에 대한 양적 방법을 사용한 분석 등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데이터들의 질을 분류하고 선별하여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기준 제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치판단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갈등정보체계 구축 모형과 적용, 확대를 위한 사례분석이 주요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화적 분석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방안은 제외된 것인데, 이는 향후 꼭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시스템의 도입, 운영을 위한 좀 더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된 선행 분석기관에 대한 비교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기관의 갈등 DB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경우도 분석기준과 시점에 따라 수집된 정보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다. 정보공유를 통하여 갈등 DB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업을 통한 자료구축 통합체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할 것인가 또는 정보 공유를 하는데 있어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 공유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갈등 DB의 정보공유는 지식공유의 문제로 지식공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데이터 사례를 연구한 문헌은 희소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갈등데이터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몇 가지 기술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가상준·안순철·임재형·김학린(2009).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 정치학회보〉, 43(2): 51-87.
- 강영진(2001).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서울: 성공회대 출판부.
- 권경득·이주호·이광원(2014). 공공정책갈등 DB 연구. 201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권영규(2006).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에 나타난 갈등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159-189.
- 김광구·김동영(2012).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DB)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271-294.
- 김학린(2012). 공공갈등의 유형, 갈등관리방식, 시민단체개입이 갈등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갈등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345-369.
- 김현우·문교식(2004).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활용한 정보소양교육. 한국정보교육학회 발표 논문집
- 박관규·주재복(2014). 정부갈등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2(1): 33-64.
- 박연호·이상국(1999). 「현대행정관리론」. 서울: 박영사.
- 박치성·정창호(2014). 사회간접자본 이해관계자 갈등관계 패턴 분석. 〈한국행정학보〉, 48(4): 375-406.
- 박치성·정창호(2015).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공갈등 유형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71-104.
- 심준섭·김지수(2011).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29-64.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서울: 대명출판사.

- 안성민(1999). 갈등관리의 제도화. 「1999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의 회고와 전망」.
- 유해운·권영길·오창택(2001).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 윤태웅(2012).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에 관한 권역별 비교연구. <지방행정연구>, 26(1): 107-136.
- 이시경(2003).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 <사회과학논총>, 22(1): 181-205.
- 임동진(201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0-20』.
- 임동진(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 정용덕(2010).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연구. <행정논총>, 48(4): 1-30.
- 조성배(2013).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1): 74-117.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과제」.
- 하성규·김성연. (2007).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부문간 갈등유형 및 갈등관리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107-130.
- 하혜영(2011). “갈등의 원인과 해법,”갈등해결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한국행정연구원.
- 하혜영(2007).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273-296.
- 하혜영(2009). 공공갈등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163-186.
- 하혜영·이달곤(2007).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329-356.
- Bartos, O. J., & Wehr, P.(2002). Using Conflict Theory. Cambridge University.
- Bercovitch, J.(1984). Social Conflict and Third Parties: Strategies of Conflict Resolu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 Dukes, E. F.(2006).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rauss, E. S.(1984). Conflict in the Diet: Toward Conflict Management in Parliamentary Politics, In E. S. Kruss(eds.), Conflict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ack, R., & Snyder, R.(1971). The Analysis of Social Conflict. In C. G Smith(ed.), Conflict Resolution: Contributions of the Behavioral Sciences (pp. 3-25).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eam Press.
- Nonaka, I.,(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5(10)
- Sandole. D. J. D. (1987). Conflict Management and Problem Solving:Interpersonal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부록〉 - 2012년 충청남도 공공갈등 분석 결과에 따른 갈등카드

갈등명	논산-계룡 행정구역 통합 갈등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논산시-계룡시)	갈등주체	정부-정부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행정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3. 8. 2012. 6. 14.	갈등단계	해소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산시, 계룡시간 통합 건의서 제출을 두고, 계룡시 주민들은 논산시의 일방적 통합추진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 행정구역 통합은 국방 클러스터 확대 등 장래 논산과 계룡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 계룡시 : 논산시와는 생활권이나 지리적 여건, 문화생활 등 여러 면이 너무 다르며, 국방도시라는 지역적 정체성이 뚜렷하므로 통합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15. : 논산·계룡 통합건의서 제출 (논산·계룡 통합을 위한 시민모임→충남도·논산시→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2012.04.27.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논산·계룡 통합 여론 청취 ○ 2012.06.14. :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논산·계룡 통합대상 제외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통합대상 제외 이후 논의는 일단락 됨 ○ 논의 기간 중 양 지역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사후 갈등관리에 대한 논의 필요 ○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언제든 재발생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08. 내일신문 - “분리된 시·군 재통합 해달라” ○ 2012.04.26. 충청투데이 - “계룡·논산시도 통합추진 갈등” ○ 2012.05.07. 뉴스1 - “안희정 지사, 정부의 일방적 행정체제개편에 반대 의견 피력” ○ 2012.05.13. 충청투데이 - “논산-계룡, 행정통합 감정대립 확산” 			

갈등명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갈등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홍성군-예산군)	갈등주체	정부-정부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행정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4. 13.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을 강제 통합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군 : 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으나 지역 내에서 추진해왔던 통합논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임 ○ 예산군 : 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이 존재하며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4.13.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홍성·예산 국가차원 통합필요지역 선정 ○ 2012.04.17.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홍성·예산 통합 여론 청취 ○ 2012.06.13.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홍성·예산 통합 계획(안) 확정 발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13년 말 까지 법률 정비 후 최종적 통합 진행 ○ 추진위원회의 통합 계획(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4년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추가 갈등이 예상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4.16. 한겨레 - “대통령 직속기구 ‘서울시 자치구 통합’ 정족수 안채우고 의결” ○ 2012.04.17. 충청투데이 - “홍성·예산 통합 놓고 갑론을박” ○ 2012.04.20. 서울신문 - “통폐합 주도권 잡기… 지자체 전운 고조” ○ 2012.04.23. 충청투데이 - “예산군의회, 예산·홍성 통합반대 결의” ○ 2012.05.02. 충청투데이 - “홍성·예산 통합논의 불붙나” ○ 2012.06.10. 충청투데이 - “54%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해야”” 			

갈등명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구역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천안시-아산시)	갈등주체	주민-주민
갈등원인	이익(배분)	갈등유형	교통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4. 26,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가 KTX 천안·아산역 택시 영업권을 놓고 전체구역 통합안을 제시하고 직권 통합을 추진하면서 천안·아산 택시업계 간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시 : 천안시 택시 업계는 포화상태로 지역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통합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함 아산시 : 이용객 편의와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증대를 위해 사업구역 통합 필요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5. 2 : 국토부 주관 공청회 개최(충남교통연수원/ 120명), 천안시 반발로 중단 2012. 6. 4 : 국토부 방침(부분통합 후 전체통합)에 대한 천안택시 반발집회 2012. 6. 11 : 아산시가 국토부에 공청회 용역안에 따라 전체통합 결정 및 시행 건의 2012. 6. 27 ~ 28 : 천안시·아산시 법인·개인택시 업체 대표자 간담회 2012. 7. 5 : 간담회 결과 천안시가 의견을 국토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통합에는 절대 반대하며 현행유지 입장 표명 2012. 7. 26 : 아산시가 국토부를 방문하여 입장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결과 및 국토부 방침에 따라 즉시 직권으로 전체통합 할 것을 건의 2012. 8. 7 : 아산시 의견 제출에 따른 천안시 의견 국토해양부 제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도, 양시 및 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조정 어려움 직권 조정 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협의회 및 공청회 등 현재까지 양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추진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4.26. 뉴시스 - “천안 택시업계국토해양부 KTX역 영업권 합의서 이행하라 2012.05.02. 세계일보 -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통합 갈등 심화” 2012.05.02. 뉴시스 -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갈등 공청회 '파행'” 2012.05.02. 뉴시스 - “천안·아산 택시영업 전체통합 주장...천안 택시업계 반발” 2012.05.02. 연합뉴스 -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전체 통합안 나와” 2012.05.02.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통합해야” 			

- 2012.05.03. 뉴스1 -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갈등, 전체 통합이 최적”
- 2012.05.03. 서울신문 - “택시영업구역 싸고 또다시 충돌”
- 2012.05.13. 뉴시스 -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국토해양부 직권조정”
- 2012.05.15. 연합뉴스 -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최종 조정 6월말 결정 앞뒀”
- 2012.05.15.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분쟁 끝나나”
- 2012.05.17. 뉴시스 - “천안 시의회·택시업계 “아산과 사업구역 통합 절대반대”
- 2012.05.21.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합리적 해결을”
- 2012.05.21.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택시영업권 분쟁 직권조정 초읽기”
- 2012.05.29. 내일신문 -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마찰 점입가경”
- 2012.05.31. 충청투데이 - “천안택시 4일 영업중단”
- 2012.05.31. 뉴시스 - “천안 택시업계 6월4일 영업중지”
- 2012.06.01. 뉴시스 - “천안 택시종사자 3000명 국토부 집회…운행 전면중단”
- 2012.06.04. 서울파이낸스 - “천안지역 난데없는 '택시대란', 웬일?”
- 2012.06.04. 뉴시스 - “천안 택시 운행중단…택시 기다리는 외국인들”
- 2012.06.05. 뉴시스 - “천안-아산 택시통합 없던 일로?”
- 2012.06.05. 뉴스타운 - “아산/천안택시 사업구역 통합, '진통’”
- 2012.06.05. 서울신문 - “영업권 직권조정 반대” 멈춰 선 천안택시 “
- 2012.06.05. 연합뉴스 -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통합 7월 이후로 늦춰”
- 2012.06.05. 아시아경제 -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통합 ‘진통’ ”
- 2012.06.06. 충청투데이 - “아산택시 영업권 통합 촉구”
- 2012.06.11. 충청투데이 - “천안택시 20일 정상 운행할 듯”
- 2012.06.12. 내일신문 - “천안택시 “사업구역 현행대로도 좋다”
- 2012.06.13. 충청투데이 - “천안택시 20일 결국 멈춰 설 듯”
- 2012.06.20. 충청투데이 - “천안 택시 전면파업 없었다”
- 2012.07.30. 충청투데이 - “천안 개인·법인택시 증차 신경전”
- 2012.08.20.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택시통합 '호지부지’”
- 2012.08.30.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 택시통합 천안시 '돌변’”

갈등명	공주대 교명변경 갈등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천안시-공주시)	갈등주체	주민-주민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기타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2. 23. -	갈등단계	교착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대학교와 천안공대의 통합 당시 통합대학교명을 제3의 명칭으로 정한다는 합의서 작성 ○ 기본합의서 이행을 놓고 지역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대학교 : 공주시와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 변경 고민 ○ 천안 지역주민 : 천안발전을 중심으로 천안지역 소재 대학의 공주 명칭 사용 반대 ○ 공주 지역주민 : 교육도시로서의 공주의 위상 유지를 위해 명칭 변경 반대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9. : 공주대 교명변경 청원서 제출(천안발전회→교과부) ○ 2012. 8. : 공주대 교명변경 추진위원회 구성 ○ 2012. 11. : 학생회 주도로 교명변경 찬반투표 실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 중인 갈등으로 공주대의 명칭 변경안에 대한 교육부 심의 여부 중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23. 뉴시스 - 천안에 있는 '공주대학교' 교명 제거해달라 ○ 2012.02.27. 경향신문 - 천안공대와 통합한 공주대, 교명 변경 놓고 갈등 ○ 2012.03.06. 충청투데이 - 정진석 공주 예비후보"공주대 교명변경 강력반대 ○ 2012.08.29. 뉴스1 - 공주대학교 교명 내년 8월까지 변경된다 ○ 2012.09.07. 한국대학신문 - 변경 대학명 두고 지역 간 입장 첨예 '난항' 			

갈등명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서산시-태안군)	갈등주체	주민-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2. 1.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 지역에 조력발전소 입지가 예정되면서, 개발과 보존으로 지역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주민 :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건설로 일자리 증가, 자치단체 세수 증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반대주민 : 가로림만 지역은 양식과 연안어업의 중심지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가 있는 등 환경적 가치가 높아 개발은 불가능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01. : 반대투쟁위원회 태안군청 앞 반대집회 개최 ○ 2012.02.09. : 가로림조력발전(주)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서 제출 ○ 2012.02.13. : 보상대책위, 조력발전소의 조기 착공을 촉구 성명 발표 ○ 2012.04.18. : 안희정 충남지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2012.04.20.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림만 지역의 개발과 보존을 놓고 지역민들의 의견 대립과 충돌이 지속됨 ○ 충남도 주도의 갈등관리 계획 마련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02. 충청투데이 -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 득보다 실” ○ 2012.02.08. 경향신문 -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 과천까지 도보행진” ○ 2012.02.10. 뉴시스 - “서산·태안 어민들,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백지화 촉구 시위” ○ 2012.02.14. 충청투데이 - “통합진보 후보들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드시 저지” ○ 2012.03.15. 충청투데이 - “가로림만 환경평가 제3기관 분석 필요” ○ 2012.03.29. 서울신문 - “충남 ‘발전소 민원’ 봇물” ○ 2012.04.23. 뉴시스 - “서산·태안 가로림만 조력발전 총선 정치쟁점으로 급부상” ○ 2012.04.04. 충청투데이 - “가로림조력, 관광어촌 도약 기회” ○ 2012.04.23. SBS -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려” ○ 2012.04.30. 충청투데이 - “가로림조력발전백지화 2차 행보 돌입” ○ 2012.11.12. 아시아경제 - “가로림만 조력발전, 대선 뒤 다시 추진” 			

갈등명	시멘트 분진 환경피해 갈등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당진시-평택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사실(신뢰)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3. 2.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 소재의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인해 인근 평택시 거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 시멘트 부두의 경우 사유지이며, 정상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분진과 악취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서해대교 통행차량과 인접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평택 지역주민 : 시멘트 회사의 불법 생산활동으로 인해 분진과 악취가 발생중이며,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진시의 선제적 조치와 체제가 필요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 : 서부두 시멘트 불법 생산활동 감사청구 기각(평택 지역주민→감사원) ○ 2012.01.13. : 평택시 환경피해 대책반 전담 TF팀 구성대응 ○ 2012.01.18. : 평택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분시험 의뢰 ○ 2012.03.02. : 분진 피해주민 감사원 앞 집회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주요 요인인 분진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필요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한 갈등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마련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02. 연합뉴스 -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 2012.03.08. 연합뉴스 - “평택항 분진 피해주민 감사원앞 집회” ○ 2012.03.14. 한겨레 - “평택항 주민들, 분진·악취 ‘고통의 나날’ ” ○ 2012.03.21. 서울신문 - “악취 대책요구·발전소 반대… ‘환경민원’ 봇물” ○ 2012.04.04. 스포츠조선 - “[소비자고발]평택항 꿈수 시멘트 공장, 주민들 생지옥” ○ 2012.06.18. 경기신문 - “평택·당진항 서부두 시멘트업체 공장등록해야” ○ 2012.06.19. 경기일보 - “평택항 서부두 시멘트 업체 불법” ○ 2012.07.03. 경기일보 - “평택·당진항 시멘트공장등록 대립각” 			

갈등명	부사간척기 행정구역 경계설정 갈등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보령시-서천군)	갈등주체	정부-정부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행정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3. 1. -	갈등단계	조정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 공사 완료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 발생에 따른 자치단체 간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보령시와 서천군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 :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 결정 주장, 분필 농지는 면적 증감 없이 논둑 등 지형지물로 경계구분 조정 ◦ 서천군 :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인 사회통념·지리적 위치·국토 효율적 관리·주민편익 등을 고려, 하천 경계선 기준 결정 필요 주장,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천 제일 깊은 곳을 중심으로 경계선 결정 필요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5.08. : 충청도, 자치단체 의견조화 및 행정구역 결정신청(농식품부→행안부) ◦ 2012.05.11. : 행안부, 매립지 지자체 결정 공고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임 ◦ 행정구역 경계 문제로 자치단체별 입장차에 따른 갈등 지속 예상 ◦ 상급 기관(충남도, 중앙정부)의 직권 해결 노력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01. 연합뉴스 - “보령시-서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진통'” 			

갈등명	금강하굿둑 기수역 복원 갈등		
갈등지역	자치단체 간 (서천군-군산시)	갈등주체	정부-정부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행정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31.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은 금강하굿둑 건설로 금강 수질악화와 연안수산업의 황폐화 및 장항항의 기능 상실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증설로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대안 미비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증설로 해수유통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호 정체수역 형성에 따른 부영양화로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 하구 환경의 파괴로 인한 연안어장의 황폐화 - 하구 내·외측 토사퇴적으로 인한 홍수예방 및 항구 기능 쇠퇴 ○ 전북 군산시 : 대체용수 공급대안이 없어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공급의 차질 우려 - 기 투자된 시설에 대한 효용의 무실 - 만조 시 또는 홍수 시 피해 우려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31 : 서천군수,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성명서 발표 ○ 2012.02.13 : 서천군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결의안 채택 ○ 2012.02.14 : 군산시장, 금강하구 해수유통 불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12.02.28 : 서천군의회, 중앙부처(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항의방문 ○ 2012.05.07 : 서천군 해수유통 추진협의회 충남도지사 면담(건의서 전달) ○ 2012.05.09 : 전북 3개시군(군산, 익산, 김제) 해수유통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 2012.05.16 : 서천군, 환경부 차관에게 해수유통 건의서 전달 ○ 2012.05.30 : 전북도의회 해수유통 불가 성명서 채택(전북도의회) ○ 2012.09.11. 국토부, ‘군산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용역’ 추진사업 전면 중지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별 입장 상이, 자치단체 간 이견과 대립으로 갈등 지속 예상 			

- 하굿둑 구조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5. 참고자료

- 2012.01.31. 머니투데이 - “서천군, 금강하구 해수유통방안 마련 촉구”
- 2012.02.01. 연합뉴스 - “금강호 수질악화 10~15년 후 농업용수 사용 불가”
- 2012.02.01. 세계일보 - “금강 하굿둑 철거 더 이상 늦춰선 안돼”
- 2012.02.01. 충청투데이 - “금강하구 생태계는 보호돼야 한다”
- 2012.02.03. 서울신문 - “수질개선 위해 뚝 열어라” “해수피해 안된다”
- 2012.02.09. 연합뉴스 -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 무산될 듯…충남도 반발”
- 2012.02.13. 충청투데이 - “금강하구 해수유통 시급”
- 2012.02.14. 뉴시스 - “문동신 시장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말도 안돼”
- 2012.02.16. 내일신문 -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 두고 마찰 격화
- 2012.03.23. 뉴시스 - “서천군, 금강해수유통 관련 전북도와 해결 모색”
- 2012.04.24. 한겨레 - “국토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거부”
- 2012.05.08. 충청투데이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道 적극나서야”
- 2012.05.09. 뉴스1 - “군산시·익산시·김제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반대”
- 2012.05.09. 새전북신문 - “서천, 군산 하굿둑 철거론서 촉발”
- 2012.05.10. 아시아경제 - “ ‘200m 때문에..’ . 충남과 전북의 대립”
- 2012.05.21. 내일신문 - “해수유통, 정치적 노림수 있다”
- 2012.05.30. 뉴시스 -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절대 불가”
- 2012.06.17. 충청투데이 - “서천 '금강하구 인공섬 환경 훼손”
- 2012.06.21. 충청투데이 - “서천, 군산 해상도시 건설 강력 반발”
- 2012.07.06. 연합뉴스 - “군산시-서천군 매립지 개발로 또 '갈등”
- 2012.07.12. 연합뉴스 - “서천군 사회단체 '군산해상도시 조성 중단' 촉구”
- 2012.07.17. 정책브리핑 - “금강 하구 해상도시 건설 추진 안해”
- 2012.07.19. 내일신문 - “이러다가 이웃사촌이 원수될 수도…”
- 2012.07.30. 아시아경제 - “3년 넘게 이어진 서천과 군산의 갈등, 해법이 뭐야”
- 2012.08.26. 충청투데이 -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 중단…금강하구 복원 대책 우선시”
- 2012.09.13. 뉴시스 - “국토부, 서천군민 뜻 수용… ‘군산 해상매립지건설 중지’ 결정”
- 2012.09.13. 충청투데이 - “'군산 해상매립지' 서천군이 이겼다”
- 2012.09.14. 뉴시스 - “군산해상매립지 용역 중단…군산시 '당혹스럽다”
- 2012.10.08. 뉴시스 - “김관영 의원 '국토부 소신행정 실종 지자체간 갈등만 키웠다”
- 2012.11.15. 뉴스1 - “'가깝고도 먼 이웃'…군산시-서천군 상생 '물꼬”

갈등명	노점상 철거		
갈등지역	천안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이익(배분)	갈등유형	행정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27. 2012. 8. 23.	갈등단계	해소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가 신부동 터미널 인근에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조성계획에 따라 일대에 위치한 노점상 점포 63개 철거를 이전 및 철거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 앞서 추진되었던 불법노점상 정비계획 추진 시 노점상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합의 하였지만 노점상 규모가 더 커지고 있음.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를 추진 중이며, 무조건 적인 철거보다는 이전을 전제로 정비사업 추진 중임 ○ 노점상 : 이전 시 매출감소가 우려되며 이전 공간 역시 충분치 않아 이전이 어려움. 천안 지역 내에 노점 허가를 받은 곳이 없는데 신부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 ~ 06. : 천안시 계고장 발송(3회), 일부 노점상 자진철거 ○ 2012.07.18.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분산시위, 경찰 총돌로 부상자 발생 ○ 2012.08.21. : 천안시 노점상(11개소) 강제철거 집행 ○ 2012.08.23. : 천안시-전노련 간 협의회 개최, 노점영업 및 시위 중단 합의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으로 노점상 철거 후 종사자의 생계 방안 마련 강구 등 갈등발생 및 해결 후 사후 단계를 위한 노력 지속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27. 뉴시스 - “천안지역 노점상연합회 노점단속 반발 시위” ○ 2012.07.02. 뉴시스 - “천안시 터미널 노점상 강제철거 1인시위 ” ○ 2012.07.02. 충청투데이 - “"생존권 짓밟는 행위다" vs "이전 요구일 뿐” ○ 2012.07.09. 충청투데이 - “천안시 "신부동 일부 노점 철거 강행” ○ 2012.07.10. 연합뉴스 - “노점상 철거 놓고 천안시-전노련 충돌 우려” ○ 2012.07.18. 뉴시스 -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천안서 대규모 시위...경찰과 충돌로 부상자 발생” ○ 2012.07.19. 뉴시스 - “천안동남경찰, 노점상 철거 반발시위 13명 입건” ○ 2012.07.19. 충청투데이 - “천안 전노련 집회 장기전 가나” ○ 2012.08.17. 연합뉴스 - “천안 터미널 노점상 철거 긴장 고조” ○ 2012.09.12. 충청투데이 - “전노련 천안회원들 신부동 노점 기습 설치” ○ 2012.09.19. 충청투데이 - “천안 신부동 노점상 갈등 현재진행형” 			

갈등명	천안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갈등지역	천안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9. 12.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가 관내 제5산업단지를 분양 중 계획변경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변경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계획되어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나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음 ○ 지역주민 : 산업단지 계획 시 입지규모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필수사항은 아니었으나, 시가 분양계획을 변경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변경됨. 처리시설 입지 인근에 학교가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반대 입장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4.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2012.09.12. : 천안시의회 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 감사 실시 촉구 ○ 2012.09.17. :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위원회 요구사항 ,천안시 수용 ○ 2012.10.02. : 천안 시민사회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 2012.12.09. : 업체 측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내 자치단체별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이 증가함 ○ 타지역에서도 유사 갈등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적, 행정적 진행 사항에 대한 검토와 사례 공유가 필요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9.12. 충청투데이 - 천안5산단 폐기물 처리장 논란 ○ 2012.09.18. 대전시저널 - “천안제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갈등 해결실마리 찾아” ○ 2012.09.18. 뉴시스 - “천안시 5산단 주민요구 수용...전면 재검토 주장 일축” ○ 2012.09.26. 뉴시스 - “천안시의회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 2012.10.02. 뉴시스 - “천안 시민단체 5산단 폐기물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 ○ 2012.11.13. 충청투데이 - “천안시 5산단 폐기물처리장 승인 잡음” ○ 2012.12.09. 뉴시스 - “천안 5산단 폐기물시설 법정공방 시작” 			

갈등명	위험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갈등지역	천안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2. 10.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주민거주시설 인근에 화공약품 저장소 입지가 예정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허가가 부당하다며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 허가과정에 문제는 없으며 관련법상 행정에서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며, 화공약품 변경신고는 건축물 완공 후 업체에서 제출하는 내용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 중 제재가 어려움 ○ 지역주민 :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 전원주택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근에 학교 등이 입지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허가과 입지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7. : 화공약품 저장소 설치허가(부지 880㎡, 12만t 규모) ○ 2012.12.10. : 독극물저장소 입주반대추진위원회 위험물 처리시설 입주반대 청원서 제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시설(위험물 저장소) 입주에 따른 갈등으로 허가과 입지를 제한할 규정이 없음 ○ 7월 허가 신청 후 주민들이 인지하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상당히 늦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주민사전 고지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2.10. 충청투데이 - “화공약품 저장소 건립 반대” ○ 2012.12.10. 뉴시스 - “천안 목천읍 마을주민들 "화공약품 저장소 건립반대"” ○ 2012.12.16. 연합뉴스 - “천안목천 주민들 화공약품 저장소 반대…1주일째 농성” 			

갈등명	대규모 양돈장 입지 갈등		
갈등지역	천안시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7. 5.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대규모 양돈장 신축 이전이 추진,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사업예정지와 마을이 가깝게 있어 대규모 돈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어 반대함 ○ 업체 : 축사 신축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악취를 없애는 친환경사육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 예정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4.13. : 돼지사육 사업허가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28,514㎡(축사면적 11,203㎡, 돼지 7,000두 사육 예정) ○ 2012.09.15. : 성남면 대흥1리 마을주민, 양돈장 신축 반대 집회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별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으며, 적법한 시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입지가 쉽지 않음 ○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추후 진행경과와 대응방안, 환경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7.05. 연합뉴스 - “천안 성남면 주민들 기업형 양돈장 신축 반대” ○ 2012.09.15. 뉴시스 - “천안 성남면 주민들 "대규모 양돈장 반대" ” 			

갈등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갈등		
갈등지역	천안시	갈등주체	주민-주민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기타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2. 22.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대규모 유통업체가 줄지어 입점하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의무휴무일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주민 : 천안은 인구 당 대형마트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함 반대주민 : 의무휴업일 실시로 직장인들은 휴일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5.21. :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대형마트 매월 2번 일요일 강제 휴무 결정 2012.07.29. : 대전지방법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수용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결과 수용 필요 주민-주민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 분석 등을 통한 정책추진이 요구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2.22. 뉴시스 - “천안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상반된 관계자들 설전” 2012.02.22. 충청투데이 - “천안시, 나눔 부족 대형유통업체 질타” 2012.03.06. 뉴시스 - “천안시 ‘대형마트 한 달 2번 일요일 강제 휴무’ 결정” 2012.03.06. 서울경제 - “충남 천안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나선다” 			

- 2012.04.22. 충청투데이 - “충남내 대형마트 속속 강제휴무”
- 2012.05.03. 연합뉴스 - “천안 소상공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제외에 반발”
- 2012.05.23. 뉴시스 - “천안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 2012.07.29. 뉴시스 - “천안 등 충남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가능…재래시장 반발”
- 2012.07.29. 연합뉴스 - “충남도내 대형마트 휴일 정상영업 가능해져”
- 2012.07.29. 뉴스1 - “충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재래시장 반발”
- 2012.07.30. 충청투데이 - “뒤통수 친 대형마트 영세상인 분노 고조”
- 2012.08.05. 뉴시스 - “천안시·아산시, 대형마트 법적소송 반격준비”
- 2012.08.07. 대전시티저널 - “천안시, 대형마트와 전쟁 2라운드 돌입”
- 2012.08.07. 세계일보 - “정부·지자체 ‘SSM 의무휴업’ 조례 보완 추진”
- 2012.08.07. 충청투데이 - “천안시, 대형마트와 '전면전'”
- 2012.08.07. 충청투데이 -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 용납 못해””
- 2012.08.12. 뉴시스 - “천안·아산 전통시장 상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수용하라””
- 2012.08.16. 내일신문 - “천안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원칙 변함없다”
- 2012.08.26. 뉴시스 - “천안·아산 전통상인들 "대형마트야 함께 살자””
- 2012.08.26. 충청투데이 - “대형마트 휴무제 반드시 시행해야”
- 2012.09.04. 내일신문 - “대형마트 의무휴업 촉구, 중소상인이 나섰다”
- 2012.10.08. 내일신문 - “천안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의견 수렴”

갈등명	동공주IC 명칭 변경 갈등		
갈등지역	공주시	갈등주체	정부-정부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교통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3. 15. 2012. 7. 1.	갈등단계	사후단계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공주IC의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서세종IC로 명칭변경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 동공주IC 명칭 변경과 관련된 의사 협조, 공주시 의견 없음으로 원안 추진 ○ 공주시 : 행정안전부 의견에 무의견, 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확산 ○ 지역주민 : 세종시 입지로 인한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태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15. : 행정안전부 IC 명칭변경 의견수렴, 공주시 의견 없음 ○ 2012.05. 31. : 공주시 의회 반대 입장 발표 ○ 2012.06. 15. : 동공주IC → 서세종IC(동공주IC) 명칭변경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완료 ○ 서세종IC(동공주IC)로 명칭 변경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6.03. 충청투데이 - “고광철 공주시의장 "서세종IC 명칭 반대” ○ 2012.06.12. 충청투데이 - “서세종IC, 공주세종IC로 바뀌야” ○ 2012.06.24. 충청투데이 - “東공주 나들목 지켰다” 			

갈등명	신풍면 장례식장 입지 갈등		
갈등지역	공주시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기타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9. 25.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신풍면 인근 기피시설(장례식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 장례식장 입지와 관련하여 법적,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황과 의견을 검토할 것임 ○ 지역주민 : 장례식장이 입지할 경우, 교통사고 유발 위험, 주민의 정서적 삶의 피해, 지하하락과 주택단지 입주가 불가능함 ○ 업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권을 끝까지 확보할 것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 : A법인, 신풍면 백룡리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신청 제출 ○ 2012.04. : 마을 및 인근 주민 220여명 진정서 접수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시설 입지 갈등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별 규정마련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9.25. 충청투데이 - “공주 신풍면 장례식장 신축 대립각” 			

갈등명	폐기물 매립장 추가 증설 갈등		
갈등지역	보령시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3. 15.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시 관내에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처리 업체가 매립장 사용연한인 2014년에 맞추어 추가 운영을 위한 증설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서 침출수의 대량 유출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업체의 추가 증설과 사업기한 연장은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 업체 : 기존 매립장 승인 및 운영 시 주민대책위원회와 발전기금 제공, 추가 증설시 협력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설 추진 상에 법적 문제점이 없어 예정대로 진행 예정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1. : 2차 증설 환경영향평가 신청 2012.03.15. : 환경피해 대책위 환경부 앞 집회 개최(1차) 2012.04.24. : 환경피해 대책위 환경부 앞 집회 개최(2차)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선호시설(폐기물 매립장)은 입지와 운영에 상당한 갈등유발이 예상되나, 현행 법 규정상 입지자체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운영상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기타 문제들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대화와 타협이 요구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3.15. 충청투데이 - “폐기물 시설증설계획 반대” 2012.03.15. 충청투데이 - “보령 웅천읍 폐기물 매립장 추가증설 반대 “ 2012.04.24. 충청투데이 - “보령 웅천읍 "폐기물시설증설 결사반대” 2012.09.14. 연합뉴스 - “악취의 진원지...폐기물매립지” 2012.09.14. 연합뉴스 - “보령 웅천 폐기물매립장 악취로 주민 불편” 			

갈등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갈등		
갈등지역	아산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5. 6.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수도사업소가 도고면, 선장면 일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인근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사업시행 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공청회 등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공공처리시설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음 ○ 지역주민 : 마을과 가까운 곳에 하수처리장이 입지하면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됨. 인근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2. :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장 공사 착공(일 처리용량 5,200m³ 규모) ○ 2012.05.05. : 도고면 마을주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반대 집회 개최 ○ 2012.05.15. : 도고면 마을주민 타 지역 하수처리시설 견학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하수처리시설) 입지를 두고 아산시와 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갈등 해결을 위하여 아산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비선호시설인 공공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지원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5.06. 뉴시스 - “아산 주민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반대” ○ 2012.05.06. 뉴시스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반대 집회” ○ 2012.08.23. 뉴스1 - “아산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2014년 2월 준공” 			

갈등명	기업형 양계장 신축		
갈등지역	아산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2. 24.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호 인근 주민 밀집지역에 기업형 대형 양계장 입지가 예정되면서, 주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시 : 주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건축허가 승인함.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진행을 막을 근거가 없음. 추후 양계장 운영 시 주민우려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예정임 지역주민 : 양계장이 들어서는 곳은 주민밀집 지역임. 대규모 양계장 입지로 인해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생기며, 축산폐수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됨. 아산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1.26. : 양계장 건축허가 신청(건축면적 12,500㎡, 약 3만5천마리 사육 예정) 12.02.10. : 양계장 건축허가 승인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이 전업화되고 대규모화되면서 갈등이 증가 추세임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법적·행정적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에 대해 규제가 어려움 중앙정부 차원의 축산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2.24. 뉴시스 - “기업형 양계장 반발 '북기왕' 아산시장과 주민들” 2012.02.24. 뉴시스 - “아산시청사에서 집회를 연 주민들” 2012.03.29. 연합뉴스 - “아산 영인 창용리 주민 "기업형 양계장 반대”” 			

갈등명	골프장 증설 갈등		
갈등지역	아산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1. 2012. 5. 25.	갈등단계	사후단계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인면에 입지한 골프장의 증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시 : 법적·행정적 인허가 조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예정임 지역주민 : 현재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지하수 난개발로 인근 지역에 용수가 부족하며, 골프장 증설에 따라 토사 유출 등 환경훼손이 우려됨. 운영과 증설에 문제가 많으며 아산시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이 있음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12.12. : 골프장 9홀 증설 허가(347,594㎡ 증설) 2012.01.30. : 업체 대체산림조성비 미납 2012.02.28. 아산시, 생활민원 TF팀 신설, 운영 2012.05.24.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취소 2012.05.25. : 사업예정지 복구명령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아산시와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한 사안으로 허가과정에 법적·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유사사례 발생 시 자치단체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됨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환경훼손, 특혜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예정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2.19. 뉴시스 - “아산 영인면 '골프장 증설' 반대하는 마을주민들” 2012.02.21. 뉴시스 - “아산 '골프장 증설 반대' 1인 시위” 2012.02.22. 내일신문 - “진보 도지사들, 골프장은 정반대 행보” 2012.02.24. 오마이뉴스 - “속살 드러난 영인산 소나무군락...왜?” 2012.02.27. 뉴시스 - “아산 골프장 증설 반발 거세져” 2012.02.28. 충청투데이 - “아산시 집단민원에 '공공’” 2012.03.02. 뉴시스 - “아산시, 잇단 집단민원 '골머리’” 2012.04.20. 뉴시스 - “아산골프장 증설 반대 결의대회” 2012.04.22. 뉴시스 - “아산 골프장 증설 '봐주기 행정' VS '행정절차’” 2012.05.20. 충청투데이 - “아산 골프온천 리조트 '새 국면’” 2012.05.21. 연합뉴스 - “김찬경 미래저축회장 소유 아산 골프장 증설 무산” 			

갈등명	공장 소각로 증설 갈등		
갈등지역	아산시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7. 23.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주면 소재 기업에서 공장 및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면서, 불법적 증설추진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학교 인근으로 현재 소각로 가동 중에도 매연과 악취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음. 업체 측에서는 불법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업체 : 소각로가 증설이 되긴 하지만 친환경적 설비의 도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각로 보다 오염물질이 13% 적게 발생되어 문제가 없음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8.01. : 소각장 증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12.10.18. :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 공사 중지 명령 2012.10.23. : 불법증축 고발조치 2012.12.26. 동화기업 아산공장 '동화기업 환경영향평가 보고회 '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 구성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증축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주민피해, 환경오염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7.23. 뉴시스 - “아산 인주중 "학습권 침해하는 소각로 증설 반대" 촉구” 2012.10.21. 충청투데이 - “아산 인주면 소각장 주민건강 해쳐” 2012.10.22. 서울경제 - “동화기업 아산 소각로 증설 논란” 2012.10.23. 대전시티저널 - “아산시, 동화기업 소각시설 고발조치” 2012.10.24. 충청투데이 - “아산 동화기업 '도독공사'” 2012.10.25. 오마이뉴스 - “동화기업 불법행위 사법기관에 고발” 2012.11.02. 내일신문 - “충남도 허가 받지 않고 소각로 공사 지속해” 2012.12.03. 세계일보 - “동화기업, 소각로 불법증설 물의” 2012.12.26. 뉴시스 - “동화기업 아산공장 "친환경 생산설비로 지역민과 상생” 2012.12.26. 충청투데이 - “아산 동화기업 "친환경 설비 자신” 			

갈등명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 갈등		
갈등지역	서산시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기타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31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은 세수의 이동, 지역 상권 붕괴 등으로 지역 내에 악영향이 많다는 의견으로 갈등이 발생중임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지역상권 붕괴와 지역 농산물 판매 저조 등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 대형마트와 지역상생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임 ○ 업체 : 지역사회 상호 발전을 위해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 등의 노력일 지속 할 예정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23. : 서산시 의회,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충남 자치단체 최초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 2012.02.12. : 대형마트 서산지역 농특산물 구매 적극적 수용 ○ 2012.04.14. :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 우려로 인한 갈등이 증가중임 ○ 업체의 자구적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 발전 방안 마련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08. 충청투데이 - “대형마트 쉬는 날 정해 재래시장 생존권 사수” ○ 2012.02.12. 충청투데이 - “지역농산물 외면하는 서산 이마트” ○ 2012.02.16. 충청투데이 - “이마트 서산점·농업단체 '화해'” ○ 2012.02.22. 충청투데이 - “서산시의회 지역소상공인 보호 나서” ○ 2012.02.24. 아시아경제 - “대형마트 월 2회 토요일 문 닫아라” ○ 2012.02.26. 충청투데이 - “이마트는 지역과 공존하라” ○ 2012.02.26. 충청투데이 - “서산,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 ○ 2012.04.15. 충청투데이 - “서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비자 혼란” 			

갈등명	석유화학단지 환경피해 갈등		
갈등지역	서산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사실(신뢰)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1. —	갈등단계	해소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잦은 안전사고, 건강악화, 악취 등 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서산시 : 담보상태에 있던 산업단지 주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환경협의회 지속 운영 예정 ○ 지역주민 : 산업단지 조성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연, 악취, 소음에 고통받고 있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긴 주민이 다수 존재함. 산업단지 운영 시 환경오염 문제, 주민건강 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 :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 피해 호소 ○ 2012.09.24. :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구성안 전격 합의 ○ 2012.12.13. :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개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산업기반 시설로써 산업단지 운영 과정의 갈등 예방 사례 활용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8.20. 충청투데이 - “대산산단 환경평가 주민대표 참여” ○ 2012.09.24. 충청투데이 -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구성 합의” ○ 2012.11.23. 연합뉴스 - “당진·서산 환경오염 우려 목소리 높아져” 			

갈등명	동부발전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지역	당진시	갈등주체	정부-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20.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이 추진됨 ○ 동부그린발전소는 국내 최초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지역주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역 수익사업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이익을 동반할 수 있음 ○ 지역주민 : 국내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당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건립은 지역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 피해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27.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동부발전 사업허가 심의 유보 ○ 2012.06.04. : 지식경제부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조건 :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 유치동의 ○ 2012.12.26. : 지식경제부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업 허가상 조건 해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전력수급 계획으로 인해 지역내에 화력발전소가 밀집되면서 입지와 운영에 대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내 피해, 환경오염에 따른 국가, 사업자의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20. 뉴시스 - “당진동부화력 전기사업자 허가신청…주민들 반발” ○ 2012.02.27. 뉴시스 - “지경부, 당진동부화력 전기사업허가 강행추진…주민반발” ○ 2012.03.02. 이투데이 - “충남 당진 동부화력 발전사업 난항” ○ 2012.03.12. 뉴스핌 - “동부 등 대기업, 발전소 놓고 지역과 마찰” ○ 2012.06.05. 연합뉴스 - “동부발전, 국내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짓는다” ○ 2012.06.05. 매일경제 - “동부발전, 민간 첫 석탄화력발전소…2016년 가동” 			

갈등명	중부대 수도권 이전		
갈등지역	금산군	갈등주체	업체(학교)-주민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교육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2. 7.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소재 중부대학교가 타지역(고양시)에 제2 캠퍼스를 조성함 ○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본교 입지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여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금산군에 하나뿐인 대학인 중부대학교의 신규 캠퍼스 설립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조치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 중부대 :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대학 발전방향을 고민하여 이전을 결정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5.29. : 교육과학기술부 위치 변경계획 승인 ○ 2012.08.13. :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 적합 승인 ○ 2012.11.23. :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대학교의 이전은 학교 재단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결정 사항으로, 현 입지지역(금산군)과 입지 예정지역(고양시)간 입장차이가 존재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2.07. 충청투데이 - “중부대 제2캠퍼스 주민 생존권 위협” ○ 2012.02.28. 연합뉴스 - “중부대 고양캠퍼스 4월 착공..2014년 개교 ” ○ 2012.09.13. 경기일보 - “중부대 고양캠퍼스 성급한 홍보” 			

갈등명	우라늄 광산 개발		
갈등지역	금산군	갈등주체	정부-업체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5. 30.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개발업체에서 우라늄 및 바나듐 채광계획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충남도, 금산군)는 주변 자연환경, 주민 생활환경, 재산상의 불이익을 이유로의 불허 결정을 내림 ○ 이에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갈등 발생 중임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검출 및 중금속 발생,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 ○ 업체 : 환경대책을 세우고 주민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것은 부당함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09.02. :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 ○ 2011.11.30. : 업체 행정소송 제기 ○ 2012.05.30. : 금산군 우라늄 광산개발 반대 서명부 법원 제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사업예정지가 금산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추후 발생할 갈등상황에 대한 충청권 공동협력체계 마련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5.30. 뉴시스 - “금산군의회, 우라늄 광산개발 관련 탄원서 제출” ○ 2012.08.02. 뉴시스 - “충남도, 스톤헨지 우라늄광 개발 발표 예의주시” ○ 2012.08.02. 대전시티저널 - “대전 지역 우라늄 채광 소식에 충청권 술렁” ○ 2012.08.03. 아시아경제 - “충청권 우라늄광 개발 소식에 ‘화들짝’ ” ○ 2012.08.03. 대전시티저널 - “엄습하는 ‘충청권 우라늄 벨트’ 공포” ○ 2012.08.03. 머니투데이 - “국내 첫 우라늄광산 개발…지역사회 반대로 제동걸려” ○ 2012.08.07. 내일신문 - “충청권 지자체, 우라늄 개발 반발” 			

갈등명	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지역	부여군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2. 6. -	갈등단계	표출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예정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 거주지 인근에 비선호시설(혐오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정주여건 악화·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음 업체 : 매립장은 밀폐형 돔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안정성이 입증된 건설방식임. 불법적인 사업이 아니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06. : 업체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 2012.08.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2012.10.20. :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 개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통과해야하며, 실제 설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됨 부여군과 지역주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등 협력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12.06. 오마이뉴스 - “청정지역에 폐기물장? 주민 다 죽는다” 2012.12.18. 뉴스1 - “부여 은산면 주민들 “폐기물매립장 들어오면 농산물 판매 막막” 			

갈등명	기업형 도계장 입지 갈등		
갈등지역	청양군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1. 2012. 4. 2.	갈등단계	사후단계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군 화성면에 도계장 입지가 예정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도계장 입지 예정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도계장 운영에 따라 악취,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 됨. 또한 기업형 도계장 운영으로 대형차량이 농촌마을에 진입하면서 분진, 소음 등의 추가 피해도 우려됨 ○ 청양군 : 업체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사업자에게 사업진행의 어려움에 대한 협조, 협의를 통하여 사업포기 결과 도출. 예정지역은 전원주택 부지 조성 등 친환경적 대체개발 검토 ○ 업체 : 청양군과 협의를 통해 사업 중단 결정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 : 도계장 설치반대에 따른 협상 진행 ○ 2012.04.02. : 업체 도계장 설치 포기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상승,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대규모 축사시설이 농촌지역에 입지를 추진하면서 유사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중임 ○ 청양군 사례는 청양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중단 시킨 사례임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4.02. 뉴시스 -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일원 ‘도계장’ 조성 무산, 민원반대 부딪쳐” 			

갈등명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		
갈등지역	홍성군	갈등주체	업체(학교)-주민
갈등원인	가치(신념)	갈등유형	교육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10.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군 관내에 위치한 청운대학교가 인천시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청운대학교 주변에서 관련 사업에 종사 중인 주민이 다수이며, 캠퍼스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황폐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존치를 주장함 ○ 업체(학교) :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산학 협력을 위해 이전은 불가피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이전이 아닌 일부 캠퍼스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17. : 청운대학교-인천광역시 토지 매매 계약 체결 ○ 2012.03.28. : 국토해양부 청운대학교 신설 여부 판단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 2012.06.08. :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유치 원안가결 승인 ○ 2012.08.20. :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청운대학교 위치 변경심사 통과 ○ 2012.08.23. : 홍성군의회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승인 무효 소송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대학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충남지역의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10. 연합뉴스 - “청운대 총장 제2캠퍼스 관련 안희정 지사 면담” ○ 2012.01.10. 충청투데이 - “안희정 지사 "청운대 홍성과 함께 발전을” ○ 2012.01.19. 경향신문 - “청운대 인천 도화 캠퍼스 2013년 개교” 			

- 2012.01.19. YTN - “[인천] 청운대, 인천 제2캠퍼스 토지 매매 계약”
- 2012.01.20. 머니투데이 - “청운대 인천 캠퍼스부지 매입…홍성군민 반발”
- 2012.02.29. 연합뉴스 - “홍성군, 청운대 이전반대 서명부 전달”
- 2012.02.29. 뉴시스 - “홍성군, 국토부에 청운대 이전반대 8200명 서명 전달”
- 2012.02.29. 충청투데이 - “홍성군 ‘청운대 이전 반대 주민 서명부’ 국토해양부에 전달”
- 2012.03.28. 파이낸셜뉴스 - “청운대 인천 유치 법제처 해석에 달렸다”
- 2012.03.30. 아시아경제 - “국토부에 '배신'당한 인천시 '부글부글’”
- 2012.04.02. 정책브리핑 - “청운대 인천 이전 입장 바꾼 적 없다”
- 2012.04.19. 경인일보 - “감사원 '청운대 인천이전' 특혜여부 감사”
- 2012.04.19. 연합뉴스 - “감사원, 청운대 인천 도화부지 매입 과정 감사”
- 2012.04.19. 인천일보 - “청운대 인천캠, 이전 대신 신설”
- 2012.04.19. 경기일보 - “청운대 유치 마무리 도장 조만간 찍을 듯”
- 2012.04.20. 내일신문 - “청운대 인천유치 ‘산 너머 산’ ”
- 2012.04.22. 인천일보 - “홍성'소송전'… 인천'속도전'”
- 2012.04.23. 충청투데이 - “청운대 이전, 법제처 '신설'로 결정”
- 2012.05.17. 경기일보 - “청운대 도화캠퍼스 또 발목”
- 2012.05.22. 한국경제 - “청운대, 본교 지역주민 반대로 인천캠퍼스 설치 난항”
- 2012.06.05. 충청투데이 - “홍성 청운대 2캠퍼스 갈등 학생시위 확산”
- 2012.06.10. 파이낸셜뉴스 - “청운대 인천캠퍼스 내년 3월 개교”
- 2012.06.10. 뉴스1 - “청운대 제2캠퍼스, 내년 3월 인천 도화동 옛 인천대에 개교”
- 2012.08.23. 연합뉴스 - “홍성군의회, 청운대 인천캠퍼스 승인 무효 소송”

갈등명	신소재산업단지 입지 갈등		
갈등지역	예산군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개발(산업건설)	갈등유형	개발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3. 10.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에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가 명칭과는 다르게 주물산업 업체의 입지가 예정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주물공장이 입지하면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연결되어 주물공장 허가 승인을 용납할 수 없음. 입주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 이전하는 업체로 지역민에게 환경피해를 강요하고 있음 ○ 업체 : 과거와 달리 친환경적 공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지역 내에 고용창출, 세수 증가 등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5.23. 대전지방법원 공판, 예산 주물산업단지 조성 부지적합성 여부 심사 ○ 2012.10.17. 1심 법원,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 기각 판결 ○ 2012.10.24 :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1차 회의(지역주민 불참) ○ 2012.10.26 : 환경보전위원회 개최(10.24)결과 협약체결·협약서 공증 ○ 2012.11.16 : 2심 원고 항소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중이 진행 중인 사례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판단은 판결에 의함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노력 필요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3.10. 오마이뉴스 - “주물업체 현장검증, “울산처럼 공단으로 이주해야”” ○ 2012.05.23. 오마이뉴스 - “주물단지, 이 자리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뭔가?” ○ 2012.06.13. 오마이뉴스 - “주물단지 공판, 부지적합성 여부 막판 최대쟁점” ○ 2012.10.17. 오마이뉴스 - 대전지방법원 “예산 주물단지 승인 행정처분 적법” 			

갈등명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보상 갈등		
갈등지역	태안군	갈등주체	업체-주민
갈등원인	이익(배분)	갈등유형	환경
갈등시작 갈등종료	2012. 1. 1. -	갈등단계	심화기
<p>1. 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로 업체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함 <p>2. 갈등의 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산정된 피해보상금 지급과 지역별, 업종별 차등 지급을 위한 논의 필요 ◦ 업체 :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과도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산정 예정 <p>3. 주요 진행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8.14. 선진통일당, 기름유출 오염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복원 등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2.12.03.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삼성중공업 사옥 앞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 2012.11.22.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협의체 개최 <p>4. 갈등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금액 산정, 배분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중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주도의 협의회 운영이 요구됨 <p>5.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4.30. 충청투데이 - “태안 기름유출 보상 특별법 제정” ◦ 2012.07.05. 프레시안 - “대법관 후보자들, 이들은 왜 삼성에 관대했을까?” ◦ 2012.07.12. 연합뉴스 - “태안 기름피해 배상 지지부진..배상률 6.7%” ◦ 2012.07.12. 경향신문 - “ ‘태안 재앙’ 4년6개월 지났건만… 배상액 6.7%” ◦ 2012.08.14. 충청투데이 - “태안유류사고 피해보상 연말까지 정리하자” ◦ 2012.09.25. 충청투데이 - “손님 끊겨 생활고에 자살… 실질적인 보상대책 절실” ◦ 2012.10.21. 해럴드POP - “태안 유류유출 피해민들 “지역발전기금 5배 이상 증액하라” 상경시위 준비 “ ◦ 2012.10.21. 충청투데이 - “태안 기름피해 1천명 25일 상경집회” ◦ 2012.10.30. 머니투데이 - “김태흠 "태안 보상, 5천억 내놓겠느냐" 삼성 "검토하겠다” ◦ 2012.12.03. 연합뉴스 - “서해안 유류피해민 삼성본관 앞 대규모 시위” ◦ 2012.12.03. 뉴스1 - “태안기름 피해주민 "청정 서해바다 죽인 삼성, 즉시 살려내라” ◦ 2012.12.04. 동아일보 - “기름유출 5년 태안 “갈매기는 돌아왔지만, 사람은 입에 풀칠도…” ◦ 2012.12.04. 헤럴드POP - “태안기름 유출보상 놓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갈등”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연 구 진 · 임다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0-13 ·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글쓴이 · 장창석, 임다정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0년 12월 31일 / 발행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33(사회통합연구실)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55-5-03350

<http://www.cni.re.kr>

© 2020.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